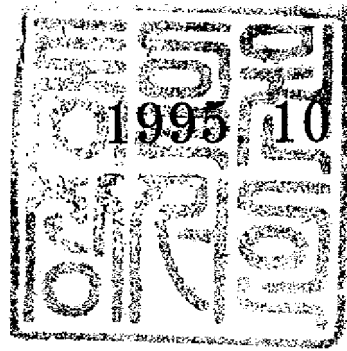


중국·대만, 미국 출장 수집자료

중국·대만관계 및 한반도문제 관련 자료집



통 일 원
(남북회담사무국)

〈목 차〉

중국·대만관계자료

I. 냉전후 중국의 국제환경	3
II. 아시아 태평양의 다변화	61
III. 대만의 통일정책 및 본토문제	87

한반도문제 관련자료

IV. 미국의 대북정책	113
V. 한국 - 핵확산 금지 분쟁의 불모	119
VI. 북한의 권력변동과 미국의 정치에 미치는 영향	147
VII.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장벽의 정치적 의미	155

I . 냉전후 중국의 국제환경

Chen Peiyao*

* 상해 국제문제연구소 소장(陳佩堯)

1992년 중반 이후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여론은 경시 및 무관심에서 흥미로 갑작스럽게 변화되었다.

수많은 평가가 중국의 경제개혁 업적 및 외부세계에 대한 개방 그리고 경제발전 등에 집중되었다. 동시에 서방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그들의 정책을 조정하기 시작했고 중국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몇몇 국제 경제기구들은 중국의 경제를 고의적으로 또는 부주의하게 과대 평가함으로써 중국이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냈다.

이러한 변화는 그 나름대로 뿌리 깊은 이유가 있는 바, 이는 중국의 정치적 안정 및 급속한 경제성장이나 또는 중국을 둘러싼 냉전 후의 국제환경에 연관된 것이다.

이에 대한 3단계 분석(three-level-analysis)은 중국을 둘러싼 냉전후의 국제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

첫째, 국제상황 및 세계 권력구성형태의 변화가 미친 영향

둘째, 서방의 주요국가들에 의해 수행된 중국에 대한 정책

셋째, 중국과 그 주변의 국가 및 지역들 사이의 관계

냉전 종식이래 위에서 언급된 3단계의 국제관계는 중국에 유리하게 변화였는 바, 이는 중국을 둘러싼 현 국제환경에 있어

서 지배적인 추세이며 중국에게 역사적인 발전기회를 제공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중국의 국력이 신장되어 왔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치가 쇠퇴하기 보다는 상승하여 왔다는 사실때문에, 몇몇의 서방국가들은 중국을 그들의 주요한 라이벌들 중에 하나로 간주하여 왔고, 몇몇 주변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반하여 경제 초강대국인 중국, 그리고 중국은 위협적 존재라는 말이 나왔으며, 이것은 중국과 아태지역 국가들 그리고 또한 서방국가들 사이의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기회를 포착하는 법, 유리한 요인들을 이용하고 불리한 것들을 피하는 법, 그리고 외교관계를 촉진시키는 법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1. 냉전종식 및 중국의 부상으로부터 오는 충격

제2차 세계대전후 반세기에 걸쳐 동서진영간에 있었던 대립의 종식을 의미하는 냉전종식은 독일의 통일, 마르샤바 조약기구의 해체, 3개의 발틱공화국들의 독립, 그리고 소연방의 해체 등 동유럽에서 주요한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매우 기꺼워한 것은 미국으로, 냉전초기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던 것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그의 연두교서에서 새로운 세계질서에 있어서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을 것이며, 서양가치의 우세가 확립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한층 더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게된 여타 서방국가들도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동구로 부터의 정치적·군사적 위협이 사라졌고 유럽의 안보는 확보되었으며 서부유럽은 그의 영향력을 동쪽으로 순조롭게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세계 여론은 한동안 독일에서의 상황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독일이 냉전종식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을 얻어낸 나라로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통일된 독일은 GNP가 불란서 및 영국을 합한 것 만큼 될 것이고, 수년 내에 EC에서 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있어서 우월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방국가들은 소연방이 해체된 후 2년 남짓하여 환상이 깨지게 되었다.

사실상 냉전종식후 한때 서로 대립하였던 동서진영의 주요국가들 중에서 득을 본 국가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냉전종식의 새로운 충격으로 인하여, 소련과 동구 주요국가들이 심각한 정치적·경제적 위기에 처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미국에 의해 주도된 서방진영 국가들도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

미국의 국력은 소련과의 점증적이고도 격렬한 장기 무기경쟁으로 인하여 심한 손상을 받아왔다.

연방예산의 적자는 해마다 증가해 왔다. 1992 회계년도의 재정적자는 2,902억 달러였으나 갑자기 증가하여 그 다음해엔 3,410억 달러가 되었다. 동시에 부채의 총액 또한 증가하였는 바, 공공 및 민간부분의 부채 총액은 미국 GDP의 2배인 10조 달러를 넘어 섰다.

미국의 경제는 퇴보하여 왔으며 사회문제도 현저히 증가하였다.

냉전종식후 미국은 세계 패권야망과 더불어 세계의 유일 초강대국으로 남게 되었지만, 미국은 이미 쇠퇴의 길을 걷고 있으며 그 능력도 야망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성급한 통일의 결과로 오히려 자신의 발전에 악영향을 받은 독일은 정치·경제적 위기에 봉착하였다.

연방정부에 의해 3년동안 구 동독지역에 제공되었던 4,750억 마르크(DM) 재정원조의 대부분은 사회복지, 공공안녕 및 기간 시설 등의 항목에 쓰여졌다.

이와 같이, 재정원조는 구 동독지역의 경제적 변화 및 발전에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독일경제는 1993년에도 1992년 여름에 시작된 경제침체를 거의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1993년의 실업자수는 340만명에 달하였고 구 서독지역 주에서는 1993년도 GDP가 전년 대비 2% 하락하였다.¹⁾

독일 국민들이 현실과 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정책들에 대해

1) 독일통계연감(1993)

부시 대통령은 그의 연두교서에서 새로운 세계질서에 있어서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을 것이며, 서양가치의 우세가 확립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한층 더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게된 여타 서방국가들도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동구로 부터의 정치적·군사적 위협이 사라졌고 유럽의 안보는 확보되었으며 서부유럽은 그의 영향력을 동쪽으로 순조롭게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세계 여론은 한동안 독일에서의 상황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독일이 냉전종식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을 얻어낸 나라로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통일된 독일은 GNP가 불란서 및 영국을 합한 것 만큼 될 것이고, 수년 내에 EC에서 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있어서 우월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방국가들은 소연방이 해체된 후 2년 남짓하여 환상이 깨지게 되었다.

사실상 냉전종식후 한때 서로 대립하였던 동서진영의 주요국가들 중에서 득을 본 국가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냉전종식의 새로운 충격으로 인하여, 소련과 동구 주요국가들이 심각한 정치적·경제적 위기에 처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미국에 의해 주도된 서방진영 국가들도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

미국의 국력은 소련과의 점증적이고도 격렬한 장기 무기경쟁으로 인하여 심한 손상을 받아왔다.

연방예산의 적자는 해마다 증가해 왔다. 1992 회계년도의 재정적자는 2,902억 달러였으나 갑자기 증가하여 그 다음해엔 3,410억 달러가 되었다. 동시에 부채의 총액 또한 증가하였는 바, 공공 및 민간부분의 부채 총액은 미국 GDP의 2배인 10조 달러를 넘어 섰다.

미국의 경제는 퇴보하여 왔으며 사회문제도 현저히 증가하였다.

냉전종식후 미국은 세계 패권야망과 더불어 세계의 유일 초강대국으로 남게 되었지만, 미국은 이미 쇠퇴의 길을 걷고 있으며 그 능력도 야망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성급한 통일의 결과로 오히려 자신의 발전에 악영향을 받은 독일은 정치·경제적 위기에 봉착하였다.

연방정부에 의해 3년동안 구 동독지역에 제공되었던 4,750억 마르크(DM) 재정원조의 대부분은 사회복지, 공공안녕 및 기간 시설 등의 항목에 쓰여졌다.

이와 같이, 재정원조는 구 동독지역의 경제적 변화 및 발전에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독일경제는 1993년에도 1992년 여름에 시작된 경제침체를 거의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1993년의 실업자수는 340만명에 달하였고 구 서독지역 주에서는 1993년도 GDP가 전년 대비 2% 하락하였다.¹⁾

독일 국민들이 현실과 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정책들에 대해

1) 독일통계연감(1993)

점차 불만을 나타내면서, 정치적 불안정 및 새로운 파시즘의 탄생이 독일에서 목격되었다.

동유럽의 기본적인 변화 및 소연방의 해체는 서방진영이 열렬히 기대하던 안보 및 동유럽으로의 확장을 가져다 주지 못하였으며, 세력의 불균형을 야기시켰는 바, 이는 동서진영의 대립에서 싹터왔던 인종, 종교 및 영토분쟁의 재현 및 발칸으로부터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새로운 분쟁지역의 형성으로 귀결지워졌다.

유고슬라비아는 다섯부분으로 분리되어 끝없는 내전과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소연방은 15개 부분으로 분리되어 독립국가 연합(CIS)가 되었으나 이것은 명목상일 뿐 사실상 15개 독립국의 집단인 것이다.

소연방 지역내에서는 러시아와 몇몇 중앙아시아 공화국들,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분쟁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서방국가들은 이러한 분쟁들을 진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기존의 유럽 안보조직체들도 마찬가지이다.

러시아가 붕괴되어 핵무기가 통제불능이 되고 피난민들의 탈출이 발생한다면, 서방의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안보는 심각히 손상될 것이다.

작년 러시아의 정치상황의 불안정 및 민족주의 세력의 대두

는 엘친 정부에 의해 수행된 친서방 외교정책 및 충격요법 (shock therapy)에 대한 견제요인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당국으로 하여금 NATO의 동방정책 및 보스니아 및 헤르체고비나 문제에 대한 무장간섭에 불만을 토로케하는 것이었다.

소연방과 동유럽은 서방에게 제일 큰 골칫거리이자 부담이 되었다.

구 유고슬라비아의 내전을 진압하고 그 여파를 예방코자 하였으며, 러시아에게 경제원조를 하여 러시아가 더이상 분리되는 것을 막는 반면, 러시아 민족주의 세력의 팽창을 견제하고 러시아가 서방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피하였던 서방국가들, 특히 미국은 당면한 문제들이 어렵고 그들의 간섭능력 및 재정력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의 발전 가능성이 불확실 해짐에 따라 깊이 우려하고 있다.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냉전시대에 확립된 국제질서는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여러 국가들의 국내 조직체들은 새로운 것으로 대체해야 하는 문제들에 당면하게 되었다.

모든 서방국가들에 있어서, 냉전시대에 대규모 전쟁을 위해 설립된 제도들(냉전시대의 정치적인 대표는 물론 전략, 국가기관 및 자원의 배치를 포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적절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동시에 오랜 냉전기간 동안 보류되어 온 문제들이 돌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발전은 경제적·정치적 위기를 동시에 분출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또한 정치적 상황의 불안을 야기시켰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냉전의 승자인 부시대통령이 클린턴에게 패배하였는 바, 이는 냉전을 대표하는 인물들과 정책들은 냉전 이후 시대의 필요에 더욱 적합한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에 의해 대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미국 선거에서 로스 페로의 등장은 전통적 미국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의 표현인 것이다.

서구유럽 주요국가들에 있어서, 정치적·경제적 스캔들이 꼬리를 물고 노출되었다.

독일, 불란서, 영국, 이탈리아 및 스페인에서 정부와 정당은 공세에 시달렸으며, 정치적 격변이 목격되었으며 수많은 지도자들이 연속적으로 몰락해 갔다.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였는 바, 일련의 정치적·경제적 스캔들의 발생과 정당간의 투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급기야 오랜동안 단일 여당이었던 자민당이 분리되어, 의회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상실한 후 권좌에서 물러나는 사태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2차 세계대전후 형성된 일본의 정치형

태가 기본적인 변화를 겪음으로써 여러 정치세력들이 재편성되는 새로운 불안정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서로 대립하던 양진영의 멤버들이었던 모든 나라들은 냉전의 종식과 국제질서의 변화에 의해 충격을 받았다.

냉전기간동안 양진영의 핵심적 적대지역은 유럽이었던 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냉전종식이 유럽에 미친 영향은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안정으로 표현되었다.

냉전의 종식이라 정규군이 개입한 무력충돌이 14번 발생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보스니아 및 헤르체고비나가 가장 심각한 것이다.

심각한 소요사태는 주로 CIS 및 동 유럽에 주로 집중되어 있지만 불안은 서유럽에서도 목격되었다.

보스니아 및 헤르체코비나 분쟁은 뿌리깊은 역사적 근원을 가지고 있다. 그 분쟁이 통제불능이 될 경우 아마도 그 여파가 발생할 것이다.

냉전종식이 유럽에 미친 영향은 부정적이었던 반면, 아시아에 미친 영향은 아직까지는 주로 긍정적이었다.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어 왔으며, 분쟁지역(hot spots)의 열기는 가라앉고, 몇몇의 분쟁지역의 당사자들은 정치적 수단을 통해 그들의 문제해결을 기도하였으

며, 더이상의 새로운 분쟁지역은 나타나지 않았고, 아·태지역의 경제성장 추세는 활기를 띠게 되었다.

냉전종식이 중국에 미친 영향은 예상밖으로 긍정적인 것이었다.

첫째로, 서방진영의 몇몇 사람들이 예상한 것과는 달리 냉전 후 중국 정치상황은 안정되어 왔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속하였다.

사회주의 중국은 불가피하게 소련 및 동구의 전철을 밟을 것이고 약간의 압력만 가해도 중국 공산당 지도체제하의 정치권력 구조는 와해될 것이라고 몇몇 서방진영 사람들이 한때 주장한 바 있다.

특히 1989년 사건 후에 중국에 대하여 서방국가들은 압력을 통하여 예기된 변화를 전개하려는 정책을 추구하였다.

얼마동안 사람들이 거의 참기 어려운 상황을 창출하기 위하여 경제제재 및 정치비난이 가해졌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자신만만하게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외부세계에 대한 개방정책을 펴 나갔다.

사회주의 길을 고집해 나가는 과정에서, 경제발전이 적합하지 않은 정치·경제제도는 개혁되어 나갔다.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은 혁혁한 성과를 달성하여, 정치상황은 안정되고 경제는 급속한 신장을 해 나가고 있으며,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명백히 개선되고 있는 중이다.

정치안정 및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사회주의 중

국과 개혁이 실패하고 정치상황이 혼란스럽고 경제가 위기에 봉착한 전 소연방과는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소련 및 동유럽국가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이려니와, 몇몇의 서방진영 사람들이 예측한 바의 그러한 강력한 영향이 중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소련 및 동유럽국가들의 실패와 비교해 볼 때, 중국의 성공은 더한층 돋보이는 것이며 냉전종식이 중국에 미친 영향은 부정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것이었다.

여론에 의하면, 중국은 이전보다 더 높은 명성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1992년 하반기 이래, 서방의 매스컴은 중국을 무시하기 보다는 더 많은 관심을 보여 왔으며, 비난하기 보다는 찬사를 보내왔다. 이는 사실상, 서방진영이 압력을 통해서 중국의 정책을 바꾸어 보려는데 있어서 실패했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다.

둘째로, 몇몇 서방진영 사람들에 의한 판단에 반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전략적 위치는 오히려 상승하였다.

냉전종식 후, 어떠한 사람들은 한때 중국의 전략적 위치는 쇠퇴하고 덜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들 주장의 주요한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냉전시대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동맹관계를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미국은 중국에게 정치적·경제적 양보를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소련을 견제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전략적 역할은 너스너로부터 부시에 이르기까지 미 행정부의 대중국정책에 있어서 강조되었다. 다른 한편 소련 또한 미국과의 대립을 고려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세계 여론에 있어서 “미국, 소련 및 중국간의 삼각관계”란 말이 10년 이상 사용되었다. 냉전종식과 더불어 이 삼각관계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소련은 서방진영과 협력을 개시하였을 뿐만아니라 어느정도 서방진영에 의존하였던 것이다. 동시에 미국은 더이상 중국과의 제휴가 필요없게 되었으며 중국은 삼각관계에서의 전략적 가치를 상실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거대한 영토 및 많은 국내문제를 간직한 아시아의 여느 개발도상국가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실현되지 않았다.

냉전기간 동안 특히,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있어서 비록 중국이 미·소사이의 적대관계로부터 다소 이익을 보았다 하더라도, 삼각관계에 있어서 미·소관계가 항상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였던 반면 중국·미국 및 중국·소련관계는 종속적 위치를 차지하였던 것이다.

냉전종식 후에 미국과 소련의 적대관계는 더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고 삼각관계는 그 의미를 상실하였으나, 구 소련이 통제불능상태임을 감안할 때 미국은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긴박한 러시아의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미국이 중국의 지원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구 소연방 및 동유럽 국가들이 격렬한 혼란에 빠져드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정세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과 미국은 아직 상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삼각관계가 그 의미를 잃은 후에도 중요성이 덜 한 보다 많은 국제삼각관계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자면, 국제정치 및 경제관계의 토대안에서 미국·일본·중국은 물론 미국·서유럽·중국, 미국·러시아·중국 사이의 새로운 삼각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아·태지역, 한반도, 인도차이나, 동남아시아, 남지나해 및 심지어 동남아시아에 있어서 중국이 주요 요인으로 입증되거나 또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은 사회주의국가이자 개발도상국이다. 중국이 평화적, 자주독립의 외교정책 추진을 선언한 이래 다른 국가들에 대립할 목적으로 어떠한 초강대국과도 동맹관계를 추구해 나가지 않았으며 두 군사 및 정치진영 사이의 적대관계에 개입하지 않았다.

냉전종식과 국제관계 재편은 중국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 반면 점진적으로 통합·강화되어온 중국은 양극 체제로부터 다극체제로의 변천과정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위치는 쇠퇴하기 보다는 오히려 향상되었던 것이다.

모든 국가들이 미래 세계질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목적으로 경제개발을 외교 및 국내정책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은 지적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의 권력을 포괄적으로 강화시키려는 경쟁이 시작되었다. 향후, 국제관계에 있어서 경제활동은 더욱 더 정치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다.

국제정치 및 외교에 있어서의 수많은 쟁점들은 그 배경으로 심오하고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유리한 것이다.

중국은 경제발전을 국가 핵심정책으로 추진하여 놀라운 결과를 성취함으로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세계의 새로운 추세에 부합한 정책들은 중국의 발전이나 국제협력에 유리한 것이다.

2. 서방의 중국시장 쟁탈과 더불어 세계경제 관심이 아·태지역으로 집중됨.

심도있는 개혁과 외부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개방정책으로 중

국의 경제는 신속한 성장을 해오고 있다.

해안도시를 중심으로 한 개방정책을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1992년에는 강과 국경을 따라서 그리고 내륙지방 주요도시를 개방의 중심으로 하는 전면적 개방정책이 제시되었다.

그 이래로 경제 및 무역제도의 개혁에 있어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시장경제체제는 변영 일로에 있다.

근래 중국의 발전은 서방세계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개혁 및 외부세계에로의 개방은 20세기에 가장 혁혁한 경제 기적중의 하나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된다.

1992년말, 영국의 주요 간행물의 하나인 이코노미스트지는 중국의 GNP는 1조 4천억 달러이며 이는 적어도 미국 GN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며, 20년 이후에는 중국이 세계에서 제 1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1993년 5월초, 미국의 뉴스위크 및 비지니스 위크지는 중국의 경제는 상승일로를 치닫고 있으며 다음세기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는기사들을 실었다.

IMF도 구매력기준(purchasing power parity)으로 계산한 결과 중국은 이미 미국과 일본에 뒤이어 제3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세계은행도 “거대한 중국 경제권(Great China Economic Circle)” (중국대륙, 타이완 및 홍콩 포함)은 그 세력이 미국, 일

본 및 서구 유럽같이 점점 막강해 짐으로써 제4의 세력으로 등장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세계은행의 한 경제전문가는 이러한 현재의 성장이 지속된다면 2003년에 가서 미국을 따라잡아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몇몇 서방진영 사람들이 중국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역사적 발전시각으로 다음 세기 중국의 국제적 위치를 예측함으로써 중국이 서방수준으로 도약하리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그러나 서방진영의 중국 경제력에 대한 예측은 고의적으로 또는 부주의하게 과대 평가되었다.

과대평가의 한가지 이유는 중국이 서방진영에서 한때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빨리 성장했다는 사실이다.

다른 이유는 중국경제의 급속한 발전이 세계경제의 침체가 만연해 있을때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는 “경제 초강대국 중국”이라는 선전을 통하여 “중국의 위협”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날조하는 악의에 찬 사람들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들의 추정에 따르면 중국이 언제라도 강력해지면 불가피한 침략과 팽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모든 지표는, 비록 포괄적인 발전의 정도를 나타내든

혹은 1인당 GNP나 기타 사회지표들 간에, 중국이 발전의 중하위에 머물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우리는 이점에 대해 냉정할 필요가 있다.

언급할 가치가 있는 다른 요인이 있다. 냉전종식 이후 세계 경제 중심의 변동은 국제정치 판도의 변화 및 서방 경제의 구조적 조정에 의해 가속화되었다.

1991년 마이너스 0.3%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후 세계경제는 침체국면에서 서서히 회복되는 중이다. 1990년 초나 말에 경제가 침체국면에 들어선 이래, 서방 경제는 아직껏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UN에 의해 보도된 바와 같이 세계경제의 성장은 1993년 및 1994년 각각 1% 및 2.5%로 예상된다.²⁾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서방국가들은 시장쟁탈에 열을 내고 있다.

아·태지역은 20억 인구의 시장이며 생산은 세계 총생산의 50%를 차지하고, 무역은 40%를 점하고 있다.

1993년 7월 클린턴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서 강조하였듯이 아·태지역은 미국에 있어 취업, 소득 및 경제성장의 위대한 근원이며 미국은 아시아 발전에 완전한 멤버가 될 준비를 갖추어야만 하는 것이다.

12억의 인구, 넓은 영토 및 발전의 큰 잠재력을 지닌 중국은 아시아에서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

2)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1993. 12. 27)

태지역에서 그들의 투자를 증가해 나감에 있어서, 미국과 여타 서방국가들은 중국시장을 개발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1993년 이래 중국과의 관계 신장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서방구국가들은 그들의 중국정책에 조정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가. 대 중국정책은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외교정책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취임후,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 외교정책이 경제, 국방 및 민주주의의 3개 기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천명하였다.

대 중국정책 추진에 있어 클린턴 행정부는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관계는 유지되고 또한 촉진되어야 하는 반면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를 청산해야 하며, 중국으로부터의 후원은 세계 및 지역안보의 쟁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반면에 군사력을 강화하고 무기판매를 촉진시키려는 중국의 활동은 견제되어 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미국 상표인 민주주의를 중국에 판매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어 왔으며 인권문제에서 양보를 얻어 내려고 중국에 압력을 가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압력에 굴하지 아니하였으며 미국은 목표들을 포괄적으로 달성할 수 없었다.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그 자신의 뿌리깊은 모순으로 좌절감을 맛보기 시작하였다.

미 행정부는 자신들을 그러한 모순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미국 이해관계에 합치되는 정책에 수정을 가할 뿐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경제적 요인들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으로써 미국의 이해관계는 명백히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 성격을 띠게 되었는데, 이는 어떻게 하여야 실제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중국의 거대한 시장에 발판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쟁점들을 고려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1993년 5월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Winston Lord가 중국 및 기타 여러 아·태지역 국가들을 방문했을 때 미국은 그의 모델을 다른 나라에 강요할 의향이 없음을 선언하였다.

Lord의 이 선언은 미국이 국가정책에 수정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곧바로 그 뒤를 이어 5월 28일 클린턴 대통령은 의회에서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령에 서명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무역거래에서의 최혜국(MFN) 지위를 갱신하였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그 다음해 동안 중국의 인권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현저한 향상을 최혜국 지위 갱신의 조건으로 하였다.

부가된 조건은 즉시 실현이 요구되는 것은 아닌 바, 그 의미는 명확하거나 확정적이지 못하며 그것들의 효력도 측정되기 어려우므로 향후 최혜국 지위 갱신에 신축성이 있는 것이다.

1993년 9월 국가 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에 의해 제시된 비망록을 서명함에 있어서, 클린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중국에 대한 참여정책(policy of engagement)을 채택하였다.

그 이래로 미국의 고위관리들이 잇달아 중국을 방문하였다.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APEC 비공식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미국사이의 쌍무적 정상회담이 드디어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진전은 클린턴 행정부가 안정된 중국-미국 관계는 미국의 이익, 아·태지역에서의 안정, 대량살상 무기확산과 운반수단의 방지 및 UN의 역할증진의 관점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의 시장은 미국 이해관계에 아주 중요하다.

중국에 대한 최혜국 지위를 갱신하기 위하여 백악관이 의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다음 사항들이 강조되었는 바, 1992년 중국-미국의 무역규모는 330억 달러에 달하였고, 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신속히 성장하는 미국시장이며, 미국의 대 중국수출은 매년 19%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행정부가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진척시키는데 있어서 미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미행정부가 중-미 관계를 안정시키고 진척시키기 위해 대 중국 정책을 다소 수정을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서구국가들, 특히 독일은 중국과의 정치적 및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려고 중국에 대한 그들의 비우호적 태도를 변경하여 보다 더 실제적인 정책을 채택하였다.

1989년 사건 이후, 독일은 EC에 의해 주도된 대 중국제제에 참여하였으며 여타 서방국가들 보다 더 엄격한 태도를 채택하였다.

독일의회(Bundestag)은 심지어 중국에 대한 제제를 선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서구유럽에서 유일한 사례였다. 추후 몇몇 서방국가들은 중국과의 접촉을 재개하기 시작하였으나 독일은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1992년 10월말 독일 외무장관 Kinkel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독일 관계정상화를 천명하였을 때도 독일에서는 중국에 대한 정책에 관해 열띤 논쟁이 있었고, Kinkel 자신도 비난받았던 바 독일 정부는 심지어 대만과 대규모 무기거래의 가능성까지 고려에 넣고 있었다.

그러나 1993년 이래 대 중국정책에 대한 수정을 가하여 중국과의 관계 향상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독일 정치 및 경제계 일각의 사람들은 아시아 및 국제문제에 있어서 중국에 의해 수행되는 주요한 역할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되풀이하여 주장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독일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군비축소, 군비확장 방지, 환경보호 및 분쟁지역의 문제해결 등과 같은 많은 쟁점들에 있어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부가적으로, 경제가 신속히 성장함에 따라, 중국은 아시아에서 활력적으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위의 사실들이 무시된다면, 독일은 경제적 및 외교적으로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중국-독일 경제협력을 발전시킬 역사적 기회가 도래하였으므로 독일은 중국과의 무역을 촉진시키고 중국에 투자함으로써 크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1993년초 독일의회가 중국에 대한 제재결의를 무효화한 이래 독일당국은 인권문제 등에 대해 보다 신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즉, 중국은 그 나름대로 문화적 전통이 있고 인권의 개념에 대하여 중국과 서방진영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중국-독일관계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독일 당국은 타이완에 잠수함 판매 거절,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 유지, 중국 본토 시장이 대만과의 잠수함 흥정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사 등을 표명하였다.

1993년 독일 재무장관 Guenter Rexrodt와 Kohl 수상이 각계의 대표들을 이끌고 각각 중국을 방문하였다. 그들의 방문기간 동안 거액에 달하는 수많은 중국-독일 경제 및 무역협정이 서명되었으며,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한층 더 발전해 나가고 있다.

여타 주요 서유럽 국가들도 중국에 대한 그들의 정책을 조정

할 것을 고려해 오고 있다.

프랑스 경제계 인사들은 1992년 프랑스와 대만 사이의 미라쥬 2000-5 제트기 거래로 심각히 손상된 중국-프랑스 관계에 만족할수 없었다.

Edourd Balladur가 수상에 임명되자 프랑스 정부는 “대만과의 관계를 재고” 할 것이라고 의사를 표명하였는데 이는, 중국·프랑스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회를 포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중국 본토와의 관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중국-프랑스 관계는 정상화되어 왔다.

홍콩문제로 인한 중국과 영국사이의 분쟁 이후 영국 경제계 사람들은 당국에게 중국-영국관계를 더욱 융통성있게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는 바 이는 중국과 관련된 많은 경제적 활동을 잃을까하는 두려움의 발로였던 것이다.

다. 일본은 중국과의 협력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왔는데 이는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의존이 계속 상승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동남아 국가들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및 한국 등의 주요국가들과 더불어 아·태지역은 일본 수출의 31%를 흡수해 왔으며 일본의 제일 큰 수출시장이 된 것이다.

1990년이래 계속적으로 하락하여 온 일본의 해외투자는 아시아에서는 오히려 성장하여 왔다.

1991년 일본 기업들에 의한 미국 및 유럽 투자액은 15억불이 줄어든 반면 아·태지역에의 투자는 거의 40억불 가까이 증가하였던 것이다.

일본 기업들의 아·태지역에 대한 투자는 불가피하게 늘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특별한 중요성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의존은 아마도 중국에 대한 의존으로 판명될 것이다.

중국-일본의 정치 및 경제적 관계는 20여년전 두 나라 사이에 수립된 외교관계 이래 현저히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냉전 시대에 있어서, 중국-일본의 관계는 미국-소련, 미국-일본 및 중국-미국 관계에 의하여 견제되어 왔다.

미국과 일본이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환심을 사야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 중국-일본관계가 그 토대였던 것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얻고, 국제관계 틀 안에서 미국과 동등한 동반자 자격을 얻음으로써 세계 정치강대국들 중의 하나가 되기를 희망했던 일본은 중국과 동맹을 추구할 전략적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1993년 2월 일본은 중국이 GATT 체약국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여야만 한다는 확고한 자세를 택하였으며, 중국과의 경직

된 태도를 보다 더 협력적인 것으로 바꾸라고 여타 선진국들을 종용하였다.

1993년 7월 도쿄에서의 G7 정상회담 이전에, 정상들로 하여금 인권문제들을 토의하고 중국을 비난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일본은 막후교섭을 벌여 여타 참가자들의 승인을 얻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중국에서의 신속한 경제발전을 충분히 인식한 일본은 중국-일본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다. 일본의 견해인즉 중국의 경제는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국가경제연구협회(Japanese Association for National Economic Studies) 의장에 의해 마련된 분석에 따르면 향후 도약국면에 진입한 후에 중국 경제는 매년 10%이상 성장하리란 것이다.

이 예측을 근거로 계산한다면, 2020년까지 중국의 실제 GNP는 10조 달러에 달해 미국이나 일본과 비슷하게 되리라는 전망이다. 수입이 중국 경제규모의 20%선에서 머문다면 중국의 총 수입액은 4,800억 달러로서 현재의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중국은 경제적으로 볼 때 매우 매력적인 대상이며 현재 일본은 홍콩 다음으로 중국의 두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다.

작년에는 일본의 대기업체들의 대 중국투자가 엄청난 열기를 띠었다.

대 중국정책의 조정은 경제 및 무역관계의 향상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도 초점이 모아졌다. 동시에 위에서 언급된 정책조정들에 의하여 좋은 기회들이 마련되어 왔다.

앞으로 오랜기간 동안 서방국가들은 중국 수출의 주요한 시장이자 외국 선진기술 도입의 주요한 원천이 될 것이다.

전체 수출물량의 75%가 홍콩과 서방국가들로 수출되고 외국으로 부터의 기술은 주로 G7 국가와 러시아로부터 도입됨으로 인하여, 중국경제가 서방의 주요 국가들과 정치·경제적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3. 아·태지역 : 완화된 긴장, 강화된 경제협력, 공동의 발전을 지향하는 분쟁지역

아·태지역에서는 냉전 기간중 큰 혼란과 이따금씩의 전쟁이 발발하였다.

중국인민공화국(PRC)이 세워진 후 주변지역에서 한국동란, 타이완 해협을 가로지른 날카로운 대립, 중국-인도 국경분쟁, 인도-파키스탄전쟁, 베트남 전쟁, 캄보디아 전쟁, 아프카니스탄 소련침공, 중국-베트남 분쟁, 중소분쟁 등 중국에 군사적 위협이 되는 그러한 분쟁 및 전투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중국이 양 군사진영 사이의 세계 전쟁에 연루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입각하여 소련과 미국

은 중국 주변지역에 거대한 군사력을 배치하였으며, 인접국가들 사이에는 수많은 분쟁이 있었고, 국경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주변국가들 사이 에도 분쟁이 일어났다.

냉전이 종식된 이래, 미국과 소련에 의해 주도된 두 군사진영 사이의 대립은 물론이려니와 이러한 대립으로 야기될지 모를 세계전쟁의 위협은 사라졌다.

중국 주변 분쟁지역들의 긴장은 훨씬 완화되었으며 정치적 해결방법이 모색되었다. 중국과 주변국가들 사이의 우호적이고 선량한 이웃관계는 강화되어 왔다.

구 소련은 냉전기간 동안 중·소 국경을 따라 거대한 군사력을 배치함으로써 북동, 북(몽골) 및 북서쪽으로부터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였다.

소련방의 와해와 더불어, 그의 군사력 및 전략은 어느정도 축소되었다. 비록 소련군은 막강한 태평양함대의 지원과 더불어 극동에 아직 많은 병력을 두고 있으나, 전투능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현격히 감소되었다.

1993년 싱가포르 방문시 러시아 외무장관 Kozyrev는 “소련은 1995년까지 극동의 군사력을 절반으로 줄일 것이다”³⁾라고 천명하였다. 한편 1992년말 까지 러시아는 몽골로부터 모든 군대를 철수시켰다.

중국과 북서쪽으로 국경을 같이하고 있는 CIS의 중앙아시아

3) 日本經濟新聞(1993. 9. 9)

국가들은 더이상 중국에게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

중국과 국경을 같이하고 있는 CIS 4국가들 즉,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및 타지키스탄은 국경문제 및 군비축소에 대해 중국과 교섭하기 위하여 공동대표단을 형성하였다.

일반적으로 냉전이후 북동, 북 및 북서쪽으로부터의 중국에 대한 군사위협은 현격히 감소되었거나 제거되고 있는 중이다.

한반도에 있어서 남북의 대립 및 강대국의 직접 또는 간접적 개입은 냉전기간 동안에 있어서 심각하고 복잡한 분쟁지역의 양상을 띠었다.

냉전이후 남북 고위급회담의 개최로 인하여 한반도의 상황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

1991년 양측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1992년에는 판문점 연락사무소 및 분야별 공동위원회의 발족을 보았다.

이러한 발전에 뒤를 이어 양측은 군사직통전화를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평화공존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이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남북한 모두 동시에 UN에 가입함으로써 한반도 안정에 특히 유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2년 들연히 핵시설을 검열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북한과 미국의 수차례 교섭후 그 쟁점은 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바뀌는 듯 싶었으나 아직도 한반도에는 불안정한 요인들이

많이 있으며 심각한 분쟁위험이 존재한다.

캄보디아 분쟁은 정치적 해결의 길을 걷고 있다. 네 파벌은 파리회담에서 서명된 평화협정에 따라서 정전상태를 실현하였다.

캄보디아에서 UN 과도정부와 평화유지군은 정치적 해결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비록 아직도 군사적 마찰이 존재하지만 국가의 화해는 국민의지에 부합하며 평화적 해결이 일반적인 추세인 것이다.

중국과 인도 사이에는 국경분쟁이 있으며 국경분쟁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은, 양정부는 국경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제의하였으며 양국간의 교섭 분위기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양측은 국경에서 양측 관리들의 정규적 회합, 통신 및 순회군 사작전 등의 확립을 포함한 신뢰구축방안 설치에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의 남사군도 일부와 인근 해역은 몇몇 동남아 국가들 및 베트남에 의해 점령되어 있다. 더욱이 중국과 베트남은 과거에 분쟁을 겪었다.

당해 분쟁들에 대한 중국의 평화적 해결 의지는 다른 국가들에 의해 지지되었다. “분쟁들은 제쳐놓고 공동발전에 연대”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중국은 적극적 역할을 통해 상황을 어느 정도 완화하여 왔다.

인도 및 파키스탄은 중국의 이웃국가들이다. 인도나 파키스

탄은 카슈미르 분쟁 및 소수민족·종교 등과 같은 여타 쟁점들에 대하여 서로 싸워 왔으며 양국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양측은 카슈미르 문제에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공식적으로 쌍방의 핵시설을 공격치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고위급간 군사직통전화를 개설하고, 상호간 군사훈련을 순회시키는 등 상당한 자제력을 발휘하였다.

이렇듯 중국 주변지역에 있어서 분쟁지역들의 긴장이 감소되고 군사위협이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경 22,000km를 따라 중국은 모든 15개국들과 선량한 우호관계를 확립하였다.

중국은 러시아 및 여타 CIS 국가들, 인도, 베트남, 라오스, 부탄 등의 국가들과의 국경교섭에서 현저한 진척을 보았다. 더욱이 중국과 일본, 한국 및 ASEAN 국가들을 포함하는 이웃 해양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발전이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래 중국의 주변국가들은 최상의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을 수행해 나가고 외부세계에 문호를 개방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국은 해안도시 개방을 계속해 나갈 뿐만 아니라 국경지대를 따라서 국경무역을 개발하고 경제발전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문호개방을 변두리 도시들까지 확장해 나간다는 것이 특히 지적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변경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1992년 중국은 연속적으로 13개 도시의 개방을 승인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보다 더 많은 무역자치권을 행사케 하였다.

현재까지 100개 이상의 국경 무역항들과 더불어 국경을 따라 개방된 군 및 도시들은 138개에 달하며, 이외에도 보다 더 많은 국경시장 및 교통로가 마련되었다.

운남지방에는 16개의 국경무역항과 대략 80개의 국경시장이 있어 국경 무역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흑룡강 지방에는 15개의 국경 무역항 외에 3000km의 국경을 따라서 위치한 county 및 도시들은 국경무역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신장 자치구는 다변적 무역형태를 설립하여 5개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주요시장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파키스탄, 서쪽으로는 카자흐스탄 및 키르기스, 그리고 북쪽으로는 몽골을 연결하고 있다.

게다가 광주 자치구, 길림지역, 내몽고 자치구, 티베트 자치구 및 요녕지역 등에도 많은 국경무역항 및 국경시장들이 있다.

1992년 7월, 33년간 와해되었던 티베트의 Pulan Mountain Gate에서 인도와의 국경무역이 재개되었는 바, 이는 중국의 인접국가들과의 국경무역이 이미 충분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경무역의 급속한 신장은 국경지방에서의 가공산업, 농업 및 제3차 산업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다른 나라들과 중국의 무역

채널 및 경제협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국경지대의 안정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중국의 주변국가들을 고려하여 볼 때 아·태 지역 및 남아시아 또한 주변국들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중국의 광대한 영토 및 실제적 영향력과 일치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서방 국가들이 경제적 침체가 계속되어 온 반면에 아·태지역은 활력적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1992년, 아·태지역에서의 경제 성장률은 6%를 상회하여 세계에서 선두적 역할을 하였다. 아·태지역에서의 경제발전은 중국의 경제발전과 연관되어 있으며, 중국은 아태지역 경제발전으로부터 이득을 보고 있다.

10년 동안의 중국의 개혁 및 대외개방은 아·태지역과의 경제관계를 심화시켰다.

중국 수출의 60%~70%, 그리고 50% 이상의 수입이 아·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도 아·태지역으로부터 비롯된다. 통계에 따르면, 1991년 총 투자액의 62.6%가 홍콩 및 마카오로부터, 11.58%가 대만으로 부터, 6.77%가 일본으로부터 비롯되었다.

1992년 중국에 대한 외국의 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총 116억 6천만 달러에 달하여 1991년의 2.6배가 되었다.

대부분의 투자는 아직도 아·태지역 특히, 동아시아로부터 나온다.

아·태지역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중국의 경제발전이 있어서 외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주었으며, 중국은 아·태지역의 강대국이 되었다.

중국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그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성장의 수준을 제고시켰다.

중국은 주변국가들에게 가깝고 거대한 시장이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아·태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태지역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쌍무적, 소지역적 및 지역적 모델 등 다양한 모델들을 산출하였다. 상이한 레벨의 분석이 가능해진다.

우선 첫째로, 중국 본토 및 홍콩, 대만 사이의 경제발전은 10년에 걸쳐 아주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자연적 경제지대”(Natural Economic Zone)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경제가 밀접히 연관되고 상호 의존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홍콩과 대만은 자본, 기술 및 경영기술을 제공하는 반면에 중국은 자원, 시장 및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홍콩과 대만으로 하여금 하이테크 및 기술집약적 산

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반면에, 홍콩과 대만은 국제경쟁의 압력때문에 그들의 노동집약적 및 자원집약적 산업들을 중국에 이전할 수 있는 것이다.

홍콩의 중국반환이 가까워 오고 「왕고회담」(중국·대만간 민간급회담)이후 대만 해협을 가로질러 정규적 경제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적 경제지대”는 점증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으며, 세계경제는 물론 그 지역에서의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로, 중국은 동북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 위치해 있다. “자연적 경제지대”가 핵심인 한편,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 남북한, 몽고 및 일본과 또한 연결되어 있다.

중국, 북한 및 러시아가 교차하는 두만강 지역이 자유무역지대로 개발될 계획에 있다.

1992년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로 두 나라사이의 경제협력은 보다 밀접해 졌다.

국교수립후 일년만에 한국은 대 중국 수출을 157.3% 증가 시킴으로써 중국은 한국의 세번째로 큰 수출국이 되었다.

1993년 쌍무적인 무역량은 90억 달러에 달하였다. 1993년 상반기 대한민국의 대 중국 투자총액은 1992년 상반기보다 140% 증가하였고, 투자액도 120% 늘어 9억 6천만 달러에 달하였다.⁴⁾

4) 한·중 경제협회, Korea Overseas Bulletin(1994 봄)

중국과 한국은 밀접한 경제파트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몇몇 아시아 국가들은 “황해 경제지역” 및 “동해 경제지역”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 보완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 러시아 및 북한은 자원 및 노동력이 풍부한 반면 일본과 대한민국은 발전된 산업, 풍부한 자본 및 향상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비록 국가들 상호간에 경쟁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경제적 보완성이 경쟁을 능가하고 있으며 경제협력에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다.

동남아시아에 있어서, 중국은 주로 ASEAN 국가들 및 인도차이나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중국은 ASEAN 국가들 및 인도차이나 국가들과 제품 및 기술구조 그리고 발전정도가 유사하여 수출시장의 추구, 기술 및 자본의 수입에 있어서 경쟁성이 보완성을 능가하고 있다.

홍콩, 대만, ASEAN 및 인도차이나 국가들사이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보완성은 매우 현저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 홍콩 및 대만의 ASEAN 및 인도차이나 지역 투자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곳의 최대 투자국이었던 일본을 능가하고 있다.⁵⁾ 더욱이 중국과 ASEAN 사이의 경제

5) International Herald Tribune(1993. 4. 27)

협력은 더 많은 상호투자와 더불어 신속히 발전하고 있다.

셋째로, 여타 주변국 관계로는 중국, 홍콩, 대만,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가 있다. 미국과 일본은 경제강국이며 일본은 아시아 국가이자 중국의 이웃인 한편 미국 또한 아시아에 관여해 오고 있다.

일본과 4마리 “아시아 용(Asian Dragons)” 들의 경제발전은 시장, 자본 및 기술 등의 면에서 미국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바, 중국이 경제를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면 아시아에서의 미국과 일본의 역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것에 덧붙여,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미국과 일본의 대 중국정책의 조정에 관한 이 논문의 두번째 부분에서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이 부가되어야 한다.

미·일은 그들이 주도적 역할을 맡을지도 모를 범『아·태 경제 협력체제』구축을 강력히 제안하고 있으며, 더욱이 경제협력체제에 기초한 정치적 성격을 띤 안보체제의 구축을 희망하고 있다.

비록 미국이 미국식 모델의 아·태지역 자유시장의 확충, 그 지역에서의 미국 군사력 유지, 그리고 “인권” 및 “민주주의”를 진척시키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하여튼 미국은 APEC에 기초한 “아·태 공동사회(Asia-Pacific Community)”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아·태 공동사회를 이용하여 아·태 국가들에 의한

소지역 경제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경제구상에 맞서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도 아·태공동사회의 다변적 협상기구를 이용하여 미국으로부터의 쌍무적 압력에 맞서고 여타 아·태 국가들과 연대하여 미국의 무역보복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에 있어서는 다변적 아·태 경제협력체제를 설립함으로써 중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가 있는 한편, 다른 한편에 있어서 중국은 주로 미국으로부터 오는 압력에 맞설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경쟁 및 분쟁측면에 있어서 중국은 여타 국가들과 많은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4. 아·태지역의 불안요인 및 “중국의 위협”이 중국의 대외관계 개선에 새로운 장애요인으로 부각.

현재의 국제환경은 일반적으로 볼 때 중국에 유리한 상황이다. 중국은 전쟁의 위협없이 주변 국가들과 평화와 안정속에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강대국들 및 이웃국가들이 그들의 경제발전에 최우선을 둔 이래 그들은 중국시장의 거대한 잠재력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중국의 지난 10년간에 걸친 안정적인 발전은 여타 국가들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 우뚝 서게 되었으며, 이는 비단 경제적 독립 때문만이 아니라, 탁월한 경제적 업적 및 거대한 발전의 잠재력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이중성이 있기 마련이다. 냉전후 국제관계가 중국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불안정하고 불리한 요인들도 존재하고 있다.

가. 냉전후에도 아직 불안정한 요인들이 중국 주변지역에 상존하고 있다 : 비록 현재 아·태지역에는 전쟁이 없으며 가까운 장래에 대규모의 국지전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미국 러시아 양국은 아·태지역에 거대한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 700,000명의 병력과 700척의 군함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120,000명의 병력과 210척의 군함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해군 및 공군력에 있어서 우세하다.

비단 그 두나라는 그들이 더이상 적이 아니라고 천명하고 있으나 그들은 각자 서로에게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거대한 군사력은 그들이 힘의 정치를 추구하고 다른 나라들의 문제에 간섭함으로써 지역의 긴장 및 분쟁의 뿌리가 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중국에게도 잠재적인 위협인 것이다.

냉전 이후, 일본은 계속적으로 군사비 지출을 늘려오고 있으며 군사력을 향상시켜 왔다.

안보문제들에 있어서 국제정세 및 불안요인들의 급격한 변화에 당면하여 많은 동남아 국가들 또한 그들의 군사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아·태지역은 지역안보의 효율적 기구를 갖고 있지 않다. 이 지역에서의 군비통제 및 무장해제는 유럽에서와 같은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것들은 그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불리한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다.

냉전의 종식은 아·태지역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것은 확실히 이 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도움을 주었지만, 이 요인이 오랜 반목과 모순을 신속하고 철저히 해결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반목은 냉전 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 캄보디아, 인도-파키스탄, 남사군도 및 남지나해, 그리고 중국과 몇몇 이웃국가들과의 국경분쟁 등과 같은 상이한 종류의 분쟁과 해결되지 못한 쟁점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역사발전의 반대방향으로 나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냉전이후에 세계에서는 민족주의 운동이 부활되고 있다. 중국 신강자치구의 분리주의세력, 터키, 이란, 파키스탄 및 기타 중앙아시아국가들의 회교세력들은 East Turkistan 건립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중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중국의 주변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어, 중국의 안보 및 안정에 직접적 혹은 잠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 미국의 압력 및 방해 : 위에서 논의된 것처럼 미국은 두 가지 점에서 중국을 필요로 하고 있다.

첫째로, 미국은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중국의 시장을 개방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로, 미국은 국제정치와 지역안보면에서 중국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가지 점에 있어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미국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강력한 경쟁자로 급속히 발전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정치·군사적으로도 적대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두 나라 사이의 이념의 차이가 오랜기간 동안 존속하리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발전시키려 하며, 중국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기를 원치 않으며, 세계 정치안정과 지역안보의 유지를 위하여 중국과 협력해 나가기를 원한다.

이러한 것들은 미국의 대 중국정책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들이다.

또한 미국은 끊임없이 중국-미국 관계의 마찰을 일으키며, 중

국의 대외관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그것은 미국의 대 중국정책 중 부정적 요소들이다.

미국은 대만에 F-16 전투기 및 여타 신형 군사장비를 판매하였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결의안은 '미국-대만 법률'(US Taiwan Act)이 '중국-미국 공식성명'(Sino-American Communiques)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최혜국(MFN) 지위, 인권문제, 지적재산권 및 시장접근 등의 이유를 내세워 부단히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최근에 미국은 중국의 M-11 미사일 부품 판매를 비난하고 중국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화물선 Galaxy호를 봉쇄하기 위하여 해군함정을 파견하였다.

미국 하원 소위원회는 2000년 중국의 올림픽 개최 신청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요약컨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은 중국과 경제적·정치적으로 경쟁하고 있고, 미국의 대 중국정책은 아직도 이념에 좌우되며, 많은 냉전시대의 개념들을 견지하고 있음으로써 구태의연한 힘의 정치를 구사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대외정책은 단지 행정부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회 및 백악관도 그들 나름대로의 시각을 가질 수 있으며, 정책집행은 많은 조직체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꽤 오랜기간 동안 미국의 중국정책은 가변성의 여지가 많으며, 중·미 관계는 상승과 하락의 국면을 오르내릴 것이다. 그리고 몇몇 심각한 분쟁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

중국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압력 및 방해공작은 다음 4가지 국면에서 주로 보여지고 있다.

(1) 대만문제 :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여 국제사회와 아·태지역에서의 보다 큰 역할을 하기 위해 대만을 정치적 실체로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대만을 지원할 것이다. 요컨대, 미국은 대만문제를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중국이 정치적·군사적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국제문제 특히 아·태지역 문제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대만에게 신형 군사장비를 공급하고, 대만 독립세력을 비호하고, 대만이 여러 국제기구들에 가입하는 것을 지원하며, 심지어 대만이 어떤 형태로든지 UN에 관여하는 것을 지원할 지도 모른다.

(2) 경제 및 무역문제 : “공정 및 균형무역”의 구실로 미국은 중국시장 개방 압력을 계속하고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없애려 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위치를 GATT 회원국들과 같은 위치로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요구하고, 미국 통상

법 제301조를 이용하여 중국의 최혜국 지위, 지적 재산권 등에 관하여 압력을 가할 지도 모르는 것이다.

(3) 무기판매 및 확산방지 문제 : 미국은 중국의 미사일 및 부품 수출에 반대할 것이며,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 MTCR)의 미국측 주장을 따르라고 중국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

미국은 또한 핵, 화학 및 미사일 기술을 다른 나라들에 수출하는 것에 반대할 것인 바, 미국의 견해에 따르면 이는 “확산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4) 인권문제 : “인권”은 클린턴 행정부의 중국정책 중에서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

미 행정부는 인권문제를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쟁점들과 연계하는 듯이 보인다.

중국의 최혜국 지위를 갱신하는 것을 포함한 연설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의 중국정책은 인권문제의 현저한 발전을 요구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1994~1995년 중국의 최혜국 지위의 갱신은 중국이 인권문제에 있어서 전반적인 현저한 진보를 보이는가의 여부에 좌우될 것이다.

그리하여 인권문제는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수단일 것인 바, 인권문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반체제 인사들의 석

그러므로 꽤 오랜기간 동안 미국의 중국정책은 가변성의 여지가 많으며, 중·미 관계는 상승과 하락의 국면을 오르내릴 것이다. 그리고 몇몇 심각한 분쟁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

중국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압력 및 방해공작은 다음 4가지 국면에서 주로 보여지고 있다.

(1) 대만문제 :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여 국제사회와 아·태지역에서의 보다 큰 역할을 하기 위해 대만을 정치적 실체로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대만을 지원할 것이다. 요컨대, 미국은 대만문제를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중국이 정치적·군사적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국제문제 특히 아·태지역 문제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대만에게 신형 군사장비를 공급하고, 대만 독립세력을 비호하고, 대만이 여러 국제기구들에 가입하는 것을 지원하며, 심지어 대만이 어떤 형태로든지 UN에 관여하는 것을 지원할 지도 모른다.

(2) 경제 및 무역문제 : “공정 및 균형무역”의 구실로 미국은 중국시장 개방 압력을 계속하고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없애려 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위치를 GATT 회원국들과 같은 위치로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요구하고, 미국 통상

법 제301조를 이용하여 중국의 최혜국 지위, 지적 재산권 등에 관하여 압력을 가할 지도 모르는 것이다.

(3) 무기판매 및 확산방지 문제 : 미국은 중국의 미사일 및 부품 수출에 반대할 것이며,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 MTCR)의 미국측 주장을 따르라고 중국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

미국은 또한 핵, 화학 및 미사일 기술을 다른 나라들에 수출하는 것에 반대할 것인 바, 미국의 견해에 따르면 이는 “확산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4) 인권문제 : “인권”은 클린턴 행정부의 중국정책 중에서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

미 행정부는 인권문제를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쟁점들과 연계하는 듯이 보인다.

중국의 최혜국 지위를 갱신하는 것을 포함한 연설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의 중국정책은 인권문제의 현저한 발전을 요구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1994~1995년 중국의 최혜국 지위의 갱신은 중국이 인권문제에 있어서 전반적인 현저한 진보를 보이는가의 여부에 좌우될 것이다.

그리하여 인권문제는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 될 것인 바, 인권문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반체제 인사들의 석

방을 요구하고, 관련 국제기구가 중국의 교도소를 방문하도록 하여 교도소 환경 개선을 중국에게 요구할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가족계획정책에 공격을 가하고 티베트에서의 분리주의자 활동을 “티베트의 종교와 문화보호”라는 구실하에 지원하고 있다.

정도는 다르지만 여타 서방국가들도 미국과 비슷한 중국정책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홍콩에서 중국에 대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프랑스는 대만에게 군사장비를 판매함으로써 중국-영국 및 중국-프랑스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많은 서방국가들 또한 인권문제에 있어서 미국편을 들고 있다. 그러나 주요 압력과 방해는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다. “중국의 위협” 부활 : 작년부터 일부 서방 관리들 및 언론매체는 중국의 군사력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들의 견해는 중국이 끊임없이 국방예산을 증가시키고 군사시설을 혁신해 오고 있고, 곧 외부로의 확장능력을 갖춘 군사강대국이 될 것이며, 해군 및 공군력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어 남지나해와 여타 해상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태지역에서 미국과 함께 구 소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군사력을 확장함으로써 아·태지역국가들 특히, 중국의

주변국가들에 위협스런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위협”을 선전함에 있어서, 일부 서방의 언론매체 및 국제기구들은 최근 중국의 경제발전을 과대평가하여 중국이 이미 경제 강대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중국이 강대국이 되면 필연적으로 패권주의를 추구하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주장을 사실로 믿게하고 있다.

“중국의 위협”이라고 알려진 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주변국가 및 지역에서 우려와 경계심을 자아내었다.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의미에서의 강력한 중국이 그들의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사적 이유 때문이다.

ASEAN 국가들은 남지나해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강경입장을 고수하여 중국의 영토인 그 섬들을 군사력을 이용하여 점령해 버릴지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 섬들에 대한 중국의 통제는 중국으로 하여금 지리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에게 더 가깝게 위치하게 함으로써 그들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은 21세기 이전까지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견하는 것보다 더 일찍 중국이 군사적·경제적 의미에서 지역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하여 그는 ASEAN 국가들에게 가능한한 빨리 지역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를 요청하였다. 인도는 중국이 미얀마의 Kokkozu섬의 시설을 이용하여 인도양의 자국의 해군 및 미사일 실험을 감시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일본, 한국 및 몽골의 언론매체 역시 이와 유사한 우려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소위 “중국의 위협”은 주변국가들과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중국의 노력에 새로운 장애로 등장하였다.

또한 이것은 미국 및 일본과 같은 강대국들에 의하여 냉전후 아·태지역에서 군사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려는 구실로 사용될지도 모른다.

5. 압력의 해소, 우려의 불식 및 국력신장 기회의 활용

냉전후 세계는 아직 평화롭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거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기간동안 중국의 발전은 외부로부터 불가피하게 여러 압력과 방해공작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러 기회들을 충분히 이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중국 발전에 불리한 여타 요소들을 해소해 나가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이다.

가. 중국은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외교정책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큰 업적을 이루어 왔다. 중국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국제사회에서 관찰되어져 왔다.

중국의 영향력은 상승하고 있으며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특히 조용한 자세를 견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문제에 부적절히 개입해서는 안되며 특히 주도적 역할을 떠맡아서는 안된다.

중국은 UN에서 발언권을 행사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UN에서의 임무는 주로 중국의 원칙과 입장을 제고시키고, 다른 나라들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며, 이 국제회의장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중국을 동정하고 이해하도록 하여야만 할 것이다.

중국은 주로 아·태지역에서 강대국에 속한다. 중국은 이 지역에서의 경제협력 증진과 다양한 안보기구 설립에 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있어서 중국은 적절한 역할을 떠맡게 될 것이다.

나. 미국 및 여타 서방국가들로부터 끊임없는 압력에 직면한 중국은 냉정한 분석을 하여야 하며, 한편으로는 원칙들을 고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압력을 해소해 나가는데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첫째로, 중국은 문화 및 가치측면에서 미국 및 여타 서방국가들과 명백한 차이가 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판이하게 다르다. 그러나 이념적인 차

이가 국제관계에서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재, 미국 및 여타 서방국가들은 중국에서 서구 “민주주의”가 발전되기를 원하며, “인권”이란 구실하에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한 것도 단지 이념적 투쟁만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하에서의 냉전의 연속인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냉전기간 동안의 소련과는 다르므로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10년 동안은 미국 및 여타 서방국가들의 주요한 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유형의 투쟁은 중국이 원칙 및 논리를 고수하고, 끝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다른 나라들 내부문제에 상호 간섭치 않는 한편 중국과 서방국가들 사이의 교류가 중국의 사회민주주의 및 법률제도를 강화하는 한 전반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투쟁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로, 무기판매와 핵확산방지에 관한 미국의 압력과 중국의 아·태지역 다자안보체제 가입요구 관하여, 중국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쌍무교섭이나 다자교섭에 참가하여야만 할 것이다.

냉전후 지역적 분쟁이 증가되어온 관계로 무기이전을 통제하는 문제가 보다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서방매체가 말하는 “중국의 대규모 무기수출”은 사실이 아니다.

세계 무기시장에서 중국의 무기수출은 서방 연구기관들의 통계에 따르더라도 큰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1987년부터 1991년사이 미국의 무기수출은 613억 달러에 달하고, 소련은 559억 달러, 프랑스는 112억 달러, 그리고 영국은 90억 달러인데 반하여 중국은 78억 달러로 5위에 해당되며 세계 총수출량의 5%만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무기수출은 감소하고 있다.⁶⁾ 따라서 무기판매에 제한을 가해야 할 대상은 중국이 아니라 서방 강대국들과 러시아이다.

다른 한편, 중국은 무기판매의 세가지 원칙을 계속 준수해 나가야만 한다. 즉 무기판매는 당사국들의 자기방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야만 하고, 지역평화, 안보 및 안정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되며, 다른 나라들의 내정문제에 간섭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중국은 적극적으로 UN에 의한 재래식 무기 이전원칙을 잘 준수해 나갈 것이다.

국제 무기이전의 제한에 관한 교섭을 하는데 있어서, 모든 국가들은 무기개발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며, 적절한 방위에 필요한 이상의 무기를 추구하여서는 안되며, 대규모 무기공급자들은 무기이전을 조정하고 제한하는데 대해 특별한 책임을 지며 효율적인 자제력을 주도적으로 행사하여야만 된다고 제의되어 왔다.

6) SIPRI 연감,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1992

이제 서방국가들은 핵, 생물, 화학무기와 미사일 등에 대한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무기판매를 조정하고 제한하는 한 단계로서, 중국은 핵확산 금지조약(NPT)에 참여하였고, 국제 화학무기 협약(International Chemical Weapon Convention)에 서명하였으며, 또한 MTCR 준수에 동의하였으나 서방국가들은 아직도 중국을 비방하는 견해를 펴뜨리고 있다.

서방국가들은 중국의 핵무기의 유지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핵실험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중국의 핵실험 중단을 강요하고 있다.

중국은 일관된 정책을 적절히 표명하고, 중국의 이해관계에 반한 서방국가들의 의도 및 비방에 대해 논박하여야만 한다.

또한 중국은 원칙을 견지하고 어떠한 쟁점들에 있어서의 이해관계를 정당화해야만 하는 것인 바,

(1) NPT는 1995년 5월 5일 만료될 것이며 NPT 연장문제가 계속 안전이 되어 왔다.

이 문제에 관한 협상에 있어서 핵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특별한 책임을 지고 대규모로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야 하며, 여타 NPT 비서명 국가들이 핵위협으로부터 시달리지 않을 보장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필요한 강제적 제한조치와 함께 조약의 이행이 쌍무적 또는 다변적 신뢰구축방안 추진, 비핵지대 및 평화지대 개발

등과 같이 정치·경제·외교적 수단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

(2) 중국은 핵실험의 전반적 금지를 지지하며, 이 문제에 대해 다른 핵무기 보유국가들과 교섭을 희망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은 여타 핵무기 보유국가들보다도 핵실험을 덜 실시해 왔다. 여타 핵무기 보유국가들이 이미 충분한 핵실험을 통한 핵실험 기술의 향상으로 지하 핵실험을 중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들은 중국에 핵실험 중지 압력을 가하기 위해 핵실험 중지를 발표하였다.

그것은 공정한 것이 아니며 핵실험 금지는 핵무기 보유금지와 연관되어야만 한다. 중국은 핵실험의 완전금지와 더불어 핵무기 보유의 완전금지 및 철저한 파괴의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

중국은 자연스럽게 핵실험이 축소될 수 있는 과도기간에 대해 여타 핵무기 보유국가들과 교섭할 수 있으며, 향후 수년에 걸쳐 핵실험의 완전한 금지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3) MTCR은 여타 하이테크 재래식 무기에도 확대되어야만 한다. MTCR 서명국가들 중의 하나로서 중국은 전반적, 합리적 그리고 공정한 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여타 서방국가들과 보조를 같이할 수 있다.

현재, 아·태지역 국가들은 이 지역의 장기적 안정유지와 국가경제 개발을 위하여 지역안보장치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추세이며 얼마 전에 클린턴 행정부는 아·태공동사회(Asia-Pacific Community)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평화와 안보를 위한 장기계획을 구상한 바 있고, 러시아 및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모든 아·태지역 국가들을 포함하는 아시아 안보체제의 구축을 제의한 바 있다.

ASEAN 국가들도 동남아의 안보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태지역 안보회담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1994년 방콕에서 아·태지역 안보문제에 초점을 맞춘 ASEAN 지역포럼(regional forum)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태지역에서의 안보기구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계획들은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며, 그 계획들에도 다양한 의도 및 심지어 상충되는 이해관계도 존재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계획들은 중국을 포함시키기를 원하며, 중국은 이 계획들에 참여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것이다. 이는 여타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의사소통이 중국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각 국가들은 교류 및 대화를 통하여, 차이점들을 유보한 채 공동의 토대를 추구함으로써 지역안보 및 발전을 유지해 나가고 지역적 레벨에서 새로운 국제질서 확립을 진척시킬 수 있다.

중국은 쌍무적 또는 소지역 대화 및 신뢰구축 방안을 지속적으로 찬성해 나갈 것이 확실하지만, 지역 안보기구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중국-미국 경제관계에 있어서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은

중국이 직면하여야 할 장기적인 문제이다.

미국은 중국의 주요 수출시장이며, 주요 기술도입 대상국 중의 하나이다.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중·미간 주요 경제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미국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은 무역균형을 요구한다.

(2) 미국 시장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부담을 지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은 그러한 수입에 저항키 위하여 통제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3) 미국은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 상품에 대한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그러한 문제들은 미국과 일본, 미국과 대만, 미국과 여타국가 및 지역들 사이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및 4마리 아시아 용들의 발전도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1980년대 이래, 중국의 개혁 및 대외개방정책과 더불어 많은 나라들 특히 4마리 아시아용들은 투자를 중국으로 돌려 중국에서 생산된 상품들을 미국에 수출하였다.

따라서 4마리 아시아 용들의 미국시장에의 의존은 감소하고, 미국과의 무역흑자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나, 그들의 흑자는 사실상 중국의 무역계좌에 계상되었으며, 중국의 미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엄청난 흑자를 야기시켰다.

1983년부터 보호무역주의가 미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새로운 무역법이 1984년에 공포되었다.

1985년 미국 의회는 직물수입을 규제하기 위하여 'Jenkins 법안' 을 제안하였다. 비록 그 법령은 비토되었으나 중국은 큰 직물 수출국으로서 주의를 끌었던 것이다.

미국 의회는 "1974 무역법 Jackson-Vanik 수정안" 을 통과 시켜, 대통령으로 하여금 매년 공산국가들의 이민 규제를 조사 토록 함으로써 중국의 최혜국 신분을 매년 갱신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중국-미국 경제관계에 정치적 장애가 부가되었다. 중국이 이해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는 :

(1) 중국은 미국과 경제관계를 정치 및 이념적 차이와 분리하기로 의견일치를 보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경제 관계는 양국이 공히 견지해 나아가야 할 공동의 이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2) 협상은 중국-미국 경제관계에 존재하는 모순을 해결키 위해 가능하고 필요한 수단이며 양국은 상호 양보를 해야 한다. 또한 중국은 4마리 아시아 용들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대미 우회수출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미국이 이해하도록 요구하여야만 한다.

(3) 중국은 GATT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되찾아 적극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창출함으로써, 미국과 다른 서방국가들 내에서 일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만 한다.

(4) 중국은 개혁과 개방의 정도를 계속 심화시켜 국내시장체제를 국제무역체제와 일치시키고, 수출보조금을 줄여나가며, 시장접근 및 지적재산권에 관해 미국과 합의한 각서를 준수하고, 국제무역체제의 투명성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상품과 자본을 흡수하는데 유리할 것이며, 금융업, 경영, 법률 서비스와 같은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 중국에 들어오는데 양호한 상태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쌍무적 무역균형에도 유리할 것이며, 중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마찰을 해소시킬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다. 중국의 주변국가들과 상호 신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중국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제거하며, 그리고 중국 주위에 평화적 환경을 추구하는 것이 중국 외교의 주요한 목표이다.

중국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주변국가들의 분쟁과 대립을 완화하여 정치적 해결을 도모하며, 주변 국가들과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강화시키는데 있어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몇년간 중국은 인도네시아와 외교관계를 재개하고, 싱가포르, 부르나이, 한국 및 구소련 공화국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중국은 베트남 및 라오스와 관계를 정상화하고 몽고와의 관계를 증진시켰다. 그러나 역사적 원인 그리고 중국과 몇몇 주변국가들 사이의 영토 및 해양권 논쟁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의 위협”이 확산됨으로써 주변국가들의 우려와 경계는 심화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우려와 경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국은 다음 사항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1) 중국 국방력의 투명성 증진 : 오랜기간 동안 중국 국방예산의 수준은 매우 낮았다.

비록 최근 몇년간 증가되긴 하였지만 국방예산은 총 정부예산의 8%, 그리고 GNP의 1.6% 만을 점하고 있다. 더욱이 그 한정된 국방예산도 주로 군대 유지에 쓰여지며 군사장비 현대화에 대한 지출은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국가들, 특히 중국 주변국가들은 중국의 국방예산 및 군비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며, 방어목적인 중국의 재래식 및 핵전략에 대해서도 명백히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여러가지 억측이 떠들게 되고 또한 “중국의 위협”이란 말이 보다 쉽게 확산되고 있다.

국방력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주변국가들의 의심을 해소하여 중국에 대해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하여, 중국은 중국의 국방예산, 군비, 전략, 방위산업, 군비축소, 방위산업의 민간이양 등에 관해서 외부세계에 분석을 곁들인 정례 보고서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2) 주변국가들과 군사교류 강화, 국경지역의 상호 군대배치 축소, 특히 분쟁지역들에 대한 신뢰구축.

예를들어, 분쟁지역들의 경우 협상을 통한 양측의 군사력 감

축, 정례적 군사회합 및 협의, 우발적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연락망 구축, 군사훈련 규모의 제한, 순회군사훈련, 특정지역이나 해역에서의 주변국가들과 합동 군사훈련 등과 같은 많은 일들이 수행될 수 있다.

(3) 전체 아·태지역 안보체제를 위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하여 쌍무적 또는 소지역 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함.

(4)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고수, 역사적인 이유로 인한 영토분쟁은 협상을 통한 상호양보의 태도를 취함.

분쟁에 대한 즉각적 해결이 모색될 수 없는 경우, 그것을 따로 제쳐 놓음으로써 그것이 중국과 주변국가들 사이의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압력을 해소하고 경계심을 제거하는 것이 중국이 유리한 국제환경을 십분 이용키 위한 필요조건이다. 반면에, 비교적 양호한 환경이 중국으로 하여금 서구로부터의 압력에 저항하고 주변국가들의 경계심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냉전후의 세계는 이전의 문제점들과는 다른 새로운 많은 문제점들을 안게 되었다.

국제관계의 규칙적 양상과 다른 종류의 많은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게 되었다. 중국의 국제관계 연구자들 및 관련 기관들은 그러한 사실들에 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의 개념을 조정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Ⅱ. 아시아 태평양의 다변화

Ji Guoxing*

* 상해 국제문제연구소 아·태연구실 주임

1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세계는 양극체제로부터 다극체제로 변해 가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의 다변화는 부동의 추세이다.

이러한 발전은 점증적 과정이며 과도기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러한 과도기에 살고 있으며 이 과도기는 아마도 21세기 초까지는 지속될지도 모른다.

변화를 향한 과정에 있어서 구시대의 세력균형이 파괴되고 새로운 세력균형이 아직 형성중에 있기 때문에 국제관계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재편되고 모든 나라들이 각자의 정책을 조정해 나감에 따라 불확실성 및 불예측성이 증가일로에 있다.

비록 분쟁지역에서의 긴장이 완화됐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은 인종, 종교 및 영토분쟁은 잠재적인 분쟁의 근원으로 계속 남아 있다.

게다가 인권문제와 지역국가들(regional countries)의 주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기본원칙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기가 어렵고, 다변적 세력균형체제를 위해 필요한 보편적 가치와 일반적 기본인권 채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미국이 단독으로 결정한 접근법이 아닌 일반적인 접근법이 채택되어야만 한다.

한편 지역국가들간에 국가이익의 상호작용 및 융합현상이 출현하였다.

다변화로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국가들의 국가이익이 상호융합됨으로써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적인 것이 되었다.

어떠한 나라도 그 나라 영역내에서 독자적인 발전과 그 고유성을 유지해 나갈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을 예로 들자면, 대 일본교역의 80% 및 대 유럽교역의 40%가 다국적 회사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고용의 50%가 국제교역과 연관되어 있고, 많은 해외 기업체나 해외자산을 사들일 경우 기업체와 자산의 일부가 외국인들의 수중에 놓여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비록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지역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국가들의 정책입안자들로 하여금 국가간의 관계를 다루는데 있어서 자국 및 다른 국가들의 국익을 고려하여 이해의 상충을 조정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과도기의 혼란을 줄이고 공동이익을 위하여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당면한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압력, 제재, 대립 등과 같은 재래식 방법이 더이상 바람직하

지 않은 반면에 대화, 협상 및 교섭과 같은 접근법들이 점진적으로 효율성을 발휘해 간다. 다양한 다변적 토론의 광장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2

정치적 다변화는 냉전후 아시아 태평양에 있어서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출현하고 있으며 그들은 상호협력을 도모하며 아시아 태평양의 미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태평양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고 있다.

포괄적인 국력의 차이로 인해 미래의 다변적 체제에서 그 지역 국가들이 떠맡을 역할은 다르겠지만, 이들 국가들은 향후 국제무대에서 대등한 파트너가 될 것이며,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어느 한 국가(또는 여러국가들)가 존재해서는 안될 것이다.

냉전후 다극화된 아시아 태평양은 중추적 세력인 미국이 핵심세력으로 남아 있거나 미국, 일본, 중국이나 러시아 등 몇개의 국가들이 결정적 역할을 할 그러한 아시아 태평양은 아닐 것이다.

현재의 잠정적 극체제에서 미래의 다극체제로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국이나 소련이 다극화된 체제의 한축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보다 큰 ASEAN”을 향한 통합과정에 있는 ASEAN 또한 독립적 세력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변화를 향한 현 과도기에 있어서 지역 강대국, 특히 미국이 지역 발전에 있어서 아직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강대국들(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간의 관계는 전체 아시아 태평양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이 강대국들의 관계는 불균형 상태이며 이 국가들간의 새로운 안정된 관계가 곧 출현하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관계는 전반적 조정국면하에 있으며, 또한 이 조정관계가 어떻게 전개 될는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불확실성 및 예측불가능성이 현 과도기의 주요 특징이다.

다변화로의 과정은 순탄하지는 않은 편이며 잘 균형잡힌 조정은 다변화체제 이행과정에 기여할 것이나, 잘못 관리된 조정은 문제와 긴장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구체적인 요인들은 현실에 직면하는 자발성, 냉전개념의 포기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국이익이 아닌 공동이익의 수용 등을 포함한다.

“중국, 일본 및 미국사이의 상호관계는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자기편으로 선택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되며, 어느

두나라가 힘을 합해 나머지 나라에 맞서는 것처럼 보여서도 안된다.”¹⁾

비록 지역문제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지만 미국은 과도기에 있어서 여전히 제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은 아직도 세계를 이끌 야심을 품고 있으나 그 능력은 야심에 미치지 못한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전략과 정책을 조정중에 있는데, 주요 내용은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주도적 위치 확보와 상대적 긴축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어 나가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고 안보를 보장하며 미국의 가치를 추구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조화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아직도 이 정책조정에 있어서의 강조하는 바가 불확실하고 미결인 채로 남아 있기 때문에 미국과 여타 지역강대국들과의 관계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미국의 외교정책 입안과정에는 “많은 의견대립이 존재”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존재한다.²⁾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인권정책은 너무도 정치화되고 독선적이라고 믿고 있다”, “중국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미국의 인권 캠페인은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가들(특히 일본) 사이를 이간시킬 수 있으며 최혜국 대우(MFN)는 비정치화되어야 하며

1) PacNet, No. 5, Pacific Forum / CSIS, Honolulu, 1994. 2. 10

2) Foreign Affairs, 1994. 1~2.

인권이냐 다른 어떤 교환조건 없이 연장되어야만 한다.” 3)

미국-일본 관계의 불확실성은 주로 무역마찰 및 아시아 태평양에 있어서의 주도적 위치 확보 경쟁의 상황하에서 새로운 미국-일본 동반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해 나가려는 경우마다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미국 관계의 불확실성은 이념적 요소들의 개입없이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안정적이고 실제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가능성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미 고위층간의 대화재개로 인한 발전은 양국의 관계진전과 미국이 중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헨리 키신저는 대 중국정책의 유일한 해결책은 정치적·전략적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관계를 규정하는데 있다고 말한 바 있다.⁴⁾

중국-미국 관계를 보다 더 안정된 발판위에 세우는 일은 양국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데 있다는 것을 클린턴은 이전보다 더욱 확신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⁵⁾

미국-러시아 관계의 불확실성은 러시아 국내문제 전개에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 하기

3) PacNet, op. cit.

4) Los Angeles Times, 1994. 2. 27

5) Asiaweek, 1994. 2. 16

때문이다. 클린턴의 러시아 정책은 “위험한” 것으로서 비판되어 왔다.⁶⁾

미국의 중국, 일본 및 러시아와의 관계는 공통된 사회체제, 이념 또는 가치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이익에 기초해야만 된다.

최근의 긍정적 징후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중·미 관계는 여러가지 갈등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전략 및 정책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일본의 독립적 지위는 강화되었으나 정확한 위치는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

역사적 변천과정으로서, 일본이 아시아로 방향을 전환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중이라는 보도가 있다.

“그 과정은 일본정부의 외교정책 조정을 포함하게 되는 바 일본은 궁극적으로 미국보다 그의 이웃국가들에 보다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⁷⁾

일본의 기본적인 전략목표는 경제강국에서 정치강국으로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 해 나가는 것이고, 현재의 목적은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중심적 역할”을 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위치에 도전하는 것이다.

6) Foreign Affairs, op. cit.

7) Asiaweek, 1993. 8. 11, p.15

일본은 다면적 체제내에서 미·일 관계의 성격을 크게 변화시키는 문제를 고려해 볼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 왔다.

중·일 관계는 불확실하지만 공식적인 관계는 양호하고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표면 바로 밑에 깔려있는 불신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아직도 부서지기 쉬운 기초위에 서 있다.” 8)

일본내의 보다 강력하고 현대화된 중국의 출현을 지원치 않거나 방해하려는 움직임은 오래 지속될 것이며, 그러한 풍조는 일본의 정책결정에 얼마간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의 어느 신문 기사는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일본-미국 동맹관계에 기초를 두고 중국과 거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9),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고 불안정한 요소들로 가득차 있다.” 10)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이 전략 및 정책을 조정하게 되면 더불어 일본과 여타 지역국가들과의 관계는 현저한 변화를 맞게 될 것이고,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러시아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Vladimir Zhirinovsky와

8) PacNet, op. cit.

9) Shiyokun, 일본, 1994. 1.

10) The Washington Quarterly, 1994 겨울

그의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ic Party)의 부상, 특히 고위 관리들간 위대한 러시아 민족주의의 팽배, 새로운 황제(New Tsar)나 소비에트 제국 출현 가능성은 러시아의 여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것이다.

“오늘날 러시아의 영향력이 조금씩 이전의 소비에트 공화국들 내로 침투하고 있다” 11) 는 사실은 이전의 소비에트 제국 부활의 징조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 러시아 정부는 강대국 지위 및 독자적 국가이익을 강조하는 외교정책으로 방향설정을 다시 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러시아인들은 캄란만기지를 존속시키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미국 및 일본을 다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두 대양 사이의 해상교통로에 눈독 들이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러시아는 서방과의 밀월관계에서 빠져나와, 경제원조를 얻기 위해 서방의 환심을 사려는 태도로부터 평등한 동반자적 위치에서 교섭하려는 태도로 자세를 바꾸었다.

3

냉전후의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안보 다변화가 확연히 전개되고 있는 중이다.

11) 日本産經新聞, 1994. 2. 7.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지역 안보의 새로운 균형을 형성하기 위해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공동의 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전통적인 쌍무적 안보체제가 아닌 다변적 노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소련의 해체에 의해 야기된 상황은 모든 나라에서 전략적 문제들에 대한 재고를 요구한다. 일반적 추세는 국가들 사이의 건설적 협력을, 특히 안보문제들에 관하여, 구축하는 것이며 세계적 및 지역적 국제기관들의 재편성을 촉진하는 것이다.”¹²⁾

아시아 태평양은 비교적 안정상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잠재적 불안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국지적 분쟁은 지역안보에 주요한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영토분쟁과 해상의 권리 및 이해관계에 관한 분쟁, 인종 및 종교 위기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그 지역에서 점증하고 있는 무기구입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1994년 ASEAN 국가들의 무기구입은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¹³⁾ 1995년 아시아 국가들의 총 군사비는 1,3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¹⁴⁾

국방 프로그램의 제일 중요한 분야는 해상작전능력이다. 경제력 증대 및 국가적 자신감의 향상으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더 많은 돈을 군대 현대화에 지출하는 것은 이해할만 한

12) “동북아 안보협력”, 국제 안보 및 군비통제연구소, 스탠포드대, 1993. 1. p. 1

13) 日本産經新聞, 1994. 2. 18

14) Defence Quarterly, 뉴질랜드, 1993. 12. 15.

일이므로 이것이 해양 군비경쟁의 새로운 라운드로 간주되어 질 수는 없다.

“해군력을 구조적 발전시키는 것은 잠재적 적대국들 사이의 경쟁적인 행동 때문이 아니라 증대된 경제력 및 국가적 자신감의 결과인 것이다.”¹⁵⁾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주목해 볼 가치가 있다. 가까운 장래에 해상시대의 도래로 보다 많은 해군들의 출현이 있을 것이다.

대다수의 아시아 태평양 정부들은 안보협력을 지지하게 되었으며 특정 안보장치의 틀내에서 많은 기능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추구하게 되었으나 그들은 안보장치의 형태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지역안보장치를 현실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많다.

현 군사력을 유지시키려는 선행조건하에서, 이제 미국은 이 지역의 안보이익에 대한 도전에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다변적 안보접근과 쌍무적 안보동맹에 똑같은 정도의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여태까지 미국-일본간 쌍무적 협약에 묶여 있던 일본도 이미 지역안보에 관한 다변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15) Commodore Sam Bateman, RAN, “해상에서의 신뢰·안보구축 조치 및 해양법”, 회의자료, 1991, p. 9.

단기적으로 보아 일본은 안보체제로서 ASEAN-PMC를 지지할 것인 반면에, 장기적으로 볼때는 유럽안보협력회의와 유사한 지역안보장치를 선호할 것이다.

러시아는 당분간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지역 및 소지역 안보회의를 향한 첫번째 조치로서, 동북아시아의 안보문제에 관한 다변적 협상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국은 지역안보장치 설립에 지지를 나타내었다. 중국은 “관련된 쟁점들에 관한 협상을 개최하고 상호교류와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쌍무적, 소지역적, 지역 다중채널·다차원적 안보협상의 장치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¹⁶⁾

ASEAN은 지역안보장치를 촉진시키는데 선두적 역할을 해왔다. ASEAN은 발언권을 제고하고 그 자신의 안보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안보장치를 통해 강대국들 사이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의 이질성에 따라서 안보협력은 쌍무적, 소지역적 및 지역적 접근법 그리고 정부 및 비정부 접근법을 포함하는 다중채널 방식으로 처리되어 질는지 모른다.

“실제로 상호보완과 발전을 위해서 여러 접근법들이 동시에 취하여 질 수 있다. 현재의 상황 및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공식적 반응은 동시에 진전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¹⁷⁾

16) 인민일보, 1992. 3. 24.

17) Ji Guoxing, “아·태지역의 해상안보 메카니즘”, 국제안보 및 군비통제연구소, 스탠포드 대학, 1994. 2, p. 11.

확대된 ASEAN-PMC나 ASEAN Regional Forum이 점차적으로 지역전체에 걸친 제도적·협력적 안보장치로 확대하는데 가장 적합해 보인다. 중국은 이러한 추진방법을 지지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대체로 군대가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군지휘관들 사이의 쌍무적 및 다변적 대화가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의 국방장관 사이의 안보회담이 금년에 재개되는 것은 고무적인 징후이다.

투명성 및 CMB가 아시아 태평양 안보협력에서의 첫단계를 장식할는지 모르며, 그리고 모든 지역국가들에 의한 국방백서의 발행은 정상적이고 정기적인 관행이 되어야만 한다.

동아시아의 해상분쟁이 점증적으로 심각한 양상을 띄고 있어 해상 개발을 위해서는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적 환경을 유지하는데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만 한다.

4

상호의존과 상호융합이 세계경제의 주요 특성이 됨에 따라 경제 다변화는 현세계에서 새로운 단계에 도달하였다.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급속한 경제그룹화 현상이 나타나고 이와 함께 경제적 경쟁이 한층 더 열기를 띠게 되었다.

유럽시장의 통합과 NAFTA의 창설로 “범 태평양 아시아지역 경제협력”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곧 세계경제에서 3자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져서 21세기의 세계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며 지역경제 협력이 이 지역의 경제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경제협력이 점증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 4개 신흥공업국(NIES) 및 ASEAN을 핵심세력으로 한 다변적 경제체제가 구체화되고 있다.

유럽이나 미주와는 달리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은 다음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지역, 소지역, 아주 작은 지역적 협력 및 정부 또는 비정부 경제계를 포함하는 다양한 협력방식
- 고정된 구조가 아닌 느슨한 운영상의 관행
- 개방성 및 비배타성
- 신속한 결과에 대한 조바심 없는 점진적 진전

이러한 특성들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의 활력과 부수적 능력에 기여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현시점에서 APEC을 제도화 하려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그렇게 열성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아주 작은 지역경제협력 즉 “성장 삼각지대 (growth triangle)” 가 지역내 협력에 있어서 현실적 선택이며 공통적이고도 가장 영향력 있는 양상일지도 모른다.

“성장 삼각지대” 는 주요 생산요소에 있어서 서로를 보완하는 인접 국가나 지역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낮은 레벨의 느슨한 협력인 것이다.

현재 세 삼각지대가 이미 구체화되었거나 곧 구체화될 것이다. 그것들은 「싱가폴-Johore-Riau 성장 삼각지대」, 「남중국 성장 삼각지대」 (광둥, Fujian, 타이완, 홍콩 및 마카오), 「두만강 성장 삼각지대」 (중국의 길림지방, 러시아의 극동 및 북만을 핵으로 하고 넓은 의미에서 일본, 한국, 몽골)이다

이러한 추세에 영향을 받아 가까운 장래에 다음의 「성장 삼각지대」도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Lancang Jiang-메콩강 삼각지대」 (중국 운남지방, 미얀마, 라오스, 태국 및 베트남), 「황해 삼각지대」 (중국의 발해만 지역, 한국의 서부해안지역 및 일본의 일부), 태국에 의해 창시된 「북부 삼각지대」 (태국의 푸켓, 말레이시아의 페낭 및 인도네시아의 Aceh), 그리고 「필리핀 삼각지대」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자바 및 인도네시아의 칼리마탄)¹⁸⁾ 등이 이에 해당되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에 있어서 더욱 증가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삼각지대 상호간의 그리고 삼각지대와 APEC 사이의 결합 및 협력은 증진될 것이다.

이러한 “성장 삼각지대” 를 기초로하여 APEC은 협상을 진

18) 세계경제, 북경, 1993. 11, pp. 41~44.

전시케 실질적 투자 및 무역협력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는 세계경제를 진작시키고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1960년대 이래 동아시아에서의 기본적 경제운영 방식은 흔히 “날으는 거위방식(flying geese pattern)” 이라고 일컬어져 왔는데 이는 우두머리 거위로서의 일본이 여타 거위들을 앞으로 향해 날게끔 이끄는 것을 말한다.

최근 서방 선진국들의 경기침체로 야기된 동아시아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청산한 중국의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동아시아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발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새로운 형태는 “이중 기관차 방식(dual-locomotive train pattern)”¹⁹⁾이라고 불리어질 수 있다. 즉, 동아시아 경제가 산악지대를 오르는 기차와 같은 바 일본이 선행 기관차로서 그 기차를 앞에서 끌고, 중국이 후미 기관차로서 그 기차의 뒤에서 밀어서 그 기차는 함께 앞으로 이끌어진다든 뜻이다.

5

중국의 자체발전은 아시아 태평양의 다변화 형성에 중요하다. 중국은 다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축의 하나가 될 것이다. 중국에서의 지속적인 안정과 개혁은 아시아 태평양에 큰 기여

19) 인민일보, 1993. 12. 22.

가 되고 있다.

중국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지역 다변화를 빠르게 진척시키기 위하여 다른 나라들과 손을 맞잡을 것이다.

중국은 경제 및 개혁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었으며,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중국에는 개혁노력이 실패한다면 평생에 한번 있을 근대화의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널리 인식되어 있다.

중국은 내부적으로 경제제도 및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 및 정치안정을 동시에 유지해 오고 있다.

10년 이상 봄을 맞이한 중국경제는 1993년에도 계속 확대되었다. 1993년 국내총생산(GDP)은 3조원(미화 3,448억 달러)을 초과하였으며, 이는 1992년에 비해 13.4% 증가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개혁정책을 시작한 1978년도의 3배에 달하는 것이다.”²⁰⁾

금년도 경제구조 재편성의 초점은 강력하고 대규모적 통제를 위한 금융, 세제, 은행제도, 물가제도의 개혁과 현대적 기업 창출을 위한 국가소유 기업체들의 운영체제 수정 등에 맞추어질 것이다.

금년 초 중국은 “인민폐(Renminbi)”의 공식환율을 시장환율과 통합하였고, 정부는 곧 통합된 은행간 외환시장을 구축할 것이다.

20) China Daily, 1994. 2. 25.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9%로 낮아질 것이며 1996년이 되면 중국 경제는 정상적인 시장경제 궤도에 들어설 것이다.

고도의 경제성장은 또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야기시켰다. 그 중 하나는 과열현상인데 이는 수송, 통신 및 에너지 부문에서 병목현상을 야기하였다.

과열된 주식거래, 부동산 투기 및 지난해 상반기의 과도한 투자계획이 원인의 일부이다.

다른 하나는 인플레이션이다. 1990년부터 1992년까지의 6% 인플레이션에 비교할 때, 작년 인플레이션은 13%에 달했으며 정부는 금년에 10% 이하로 유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안도감을 갖지 못한다. 그들은 금년에도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다른 문제들로는 해안지방과 농촌지역간의 격차, 균등하지 못한 소득분배, 개인치부를 위한 부패 및 권력의 남용 등이다.

중국이 발전해 나감에 따라 중국에 대한 여러가지 오해들이 지구촌에 나타나게 되었다.

중국 국력의 과대평가가 그 한 예인데 이는 특히 Rand Corporation이 제시한 구매력 기준(purchase power parity) 방식에 기초한 IMF의 재평가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집단들은 중국이 초 경제대국이 되고 있거나 될 것이라

고 설명하며, 어떤 이는 중국의 GDP가 1조 4,740억 달러에 달해 세계 2위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GDP가 나라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유일한 지표는 아니다.

발전, 사회기반시설, 환경의 질, 국민의 생활수준 등이 또한 중요한 지표들이다.

중국의 거대한 인구 때문에 사람들은 총인구에 과장된 1인당 소득인 1,200달러를 곱하여 이러한 허구적 숫자를 쉽사리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의 가격제도가 개편중에 있고 “인민폐”의 교환율과 구매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으로 인하여 중국의 구매력을 산출해 내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대체로 중국은 아직도 낮은 발전단계의 개발도상국이다. 과학, 기술 및 교육은 아직도 다소 뒤떨어져 있고, 1인당 GNP는 중위권 개발도상국들에도 미치지 못한다. 8천만 이상이 빈곤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중국은 금세기말까지 비교적 풍요롭게 될 것이며, 21세기 중반에 가서야 중진국 경제대열에 간신히 들어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오해는 “중국은 위협적 존재”라는 것이다. 이것 또한 과대평가에서 기인한다.

중국의 경제력은 진공상태를 메꾸기 위한 군사력으로 바뀔

것이라고 한다. “지역안보에 있어서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중국 국력의 장기적 성장이 최대의 근심을 야기시킨다.” 21)

이러한 그릇된 생각에 영향을 받아 아시아 태평양의 몇몇 국가들은 이 지역에서의 일본의 역할에 제동을 거는 입장을 바꾸기 시작하고, 일본과의 협력을 선호하여 심지어 일본과의 제휴가 안보이익을 최대로 보장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중국과 외부세계 사이에는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제력 증강에 몰두하는데 반하여 다른 나라들은 “중국은 위협적 존재” 라고 생각을 한다.

중국이 1990년이래 국방예산을 평균 13.6% 증가시켜 온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편이 아니다.

1992년도 국방예산은 71억 달러로 국가 총예산의 9.4%, 국가 GNP의 1.9%에 달한다.

1993년도 국방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2.73% 증가한 74억 달러로 GNP의 1.5%에 달한다.

1994년도 국방예산은 총 예산의 1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가 GNP의 1.7%에 달하는 것이다.

서방국가들은 실제 숫자를 그것보다 더 크게 산출한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총지출은 GNP의 3%를

21) David I. Hitchcock, Jr., “동아시아의 새로운 안보의제”, The Washington Quarterly, 1994 겨울, p. 2.

약간 상회하는 것이며 다른 여러나라들에 비해 낮은 정도이다.” 22)

1991~1995년간 일본의 연평균 국방비 지출은 306억 6천만 달러이다. 중국의 군사비는 일본보다 3.3배나 적은 반면 일본보다 25배나 큰 국토를 가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중국 국방비의 대부분이 군인의 봉급 및 식량에 지출된다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중국 군대가 갖춘 무기는 낡고 구식이다. 중국에게는 두가지 선택이 놓여져 있다.

그 중 하나는 국가 방위에 필요한 제한된 규모의 군사력을 현대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낡고 구식인 무기를 소유하여 현재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중국이 첫번째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이해할만 하다. 현재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절박한 위협을 받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준비를 갖추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중국군의 현대화 길은 아직도 요원하다. “중국은 위협적 존재” 라는 말은 상당히 과장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국은 “대양군사세력(blue-water power)으로의 변천” 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배적인 견해가 있다.

이것은 다소 중국의 능력을 과대 평가한 편견이며 중국의 목

22) The New York Times, 1993. 3. 17, p. 9.

표를 오해한 것이다.

중국이 그렇게 하기에는 경제적으로도 능력이 없는 것은 물론 이려니와 중국은 대양해군을 개발할 의도도 필요도 없는 것이다.

중국의 해상전략의 초점은 1980년대 이래 연안경비로부터 근해경비로 바뀌었다.

1979년 등소평이 “중국해군은 근해에서 싸울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중국해군은 수비가 그 목적이며, 수비는 확실한 전투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²³⁾라고 언급하였다.

등소평은 여기서 “근해에서의 전투”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 등소평의 해군임무에 대한 재규정을 “주로 연안경비 임무로부터 대양의 해군”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왔다.²⁴⁾

근해수비는 해상 관할구역에서 중국의 해상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범위는 중국의 전 해상영역과 이 해역에 산재되어 있는 섬들이다.”²⁵⁾

“근해 수비전략은 가능한 200Km까지의 제한된 지역을 방어

23) Military World, monthly, 북경, No. 4, 1989, p. 2.

24) Tai Ming Cheung, “중국 해군의 성장 - 우선순위, 목표, 임무, 지역적 연계”, 태평양 전략보고서, 동남아 연구소, 싱가포르, 1990, p. 5.

25) Huang Caihong, “인민 행방군의 해군 발전전략”, Naval and Merchant Ships, 북경, No. 4, 1989, p. 2.

함으로써 공격을 예방하는 것이다.”²⁶⁾

근해 수비전략은 “중국해군은 수비적 지역해군이며 대양으로 향해 나가는 공격적 해군도 아니요 연안 순찰해군도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²⁷⁾

몇몇 중국 군사간행물에 “대양으로 향한 능력”(ocean-going capability)라는 말이 가끔 나타나지만 이는 실제로 중국의 인근 3개 바다에서의 해군 군사작전을 일컫는 말이다.

몇몇 잡지들은 중국 해군이 “주요 해군세력”이 되는 소위 3단계 개발전략에 대해 언급하는 기사를 내어놓았지만, 단지 그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공식적인 정책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해군장교들 및 병사들이 오랜동안 품어왔던 국가의 해상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강한 군대에 대한 열원을 반영했을 따름이다.

중국의 항공모함 보유에 관해 여기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쟁점이 수년간 중국 해군 내부에서 널리 토의되어 왔으며 아직도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야에서 전문기술의 부족과 엄청난 돈이 연루된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해군은 이를 조심스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중국의 제한된 경제적 이해관계가 대양으로 나가는 항공모함

26) Tai Ming Cheung, op. cit, p.38.

27) Military World, op. cit.

의 필요를 정당화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한정된 경제능력이 항공모함 함대의 유지를 뒷받침하지 못할 것이다.

소련방의 붕괴는 대양함대의 부족이 아니라 경제낙후 때문이었다. 이것은 중국이 배울만한 교훈인 것이다.

동남아 국가들도 앞으로 중국이 남지나해(South China Sea)에 항공모함을 배치할 것이 아닌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실상, 남지나해는 비교적 제한된 좁은 지역이어서 큰 전함에게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남지나해는 항공모함 작전에 좋은 곳이 아니다.

경항공모함이나 소형 헬리콥터 항공모함이 아마도 남지나해에는 적합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음 세기초에나 가능한 일이고 아직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문제의 핵심은 항공모함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추구하는 방위정책 및 해상전략에 있다.

중국이 팽창적 공격이나 해상 패권야욕이 없는 순수한 수비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 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Ⅲ. 대만의 통일정책 및 본토문제*

*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 제공자료

중국이 처음으로 공동의 문화유산을 함께 하는 국가들의 집합체로 정의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5,000년 전의 일이다.

이러한 초창기의 국가 혼합체는 많은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소국가 차원을 초월하여 “대륙적” 독자성을 지니고 있는 현대 유럽과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유럽과는 달리, 중국은 2,200년 이전에 단일국가로 통일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중국인들은 통일된 중국이라는 강력한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유럽인들은 아직도 정치적으로 통합된 유럽을 성취하려는 과정에 있다.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중국이 하나의 국가라고 믿고 있으며 단일국가로의 평화적 통일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중국인들이 1842년 홍콩이 영국에 양도되기 이전, 1887년 마카오가 포르투갈에 양도되기 이전, 또한 국민당 정부와 중국 공산당 사이의 전쟁의 결과로 1949년 분리된 중국 본토 및 타이완 이전의 통일중국으로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안정되고 민주화된 중국은 전세계의 관심사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볼 때, 대만의 중화민국은 이 역사적 시점의 통일과정에서 단순한 영토의 크기가 나타내 주는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현 정책강령]

1949년이래 양측(중국과 중화민국)은 군사분쟁(1949~1978) 및 평화적 대립(1979~1987)을 겪어 왔으며, 1987년 11월 민간 부문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몇몇의 숫자들이 분단 40년 이후 양안의 새로운 관계를 설명하는데 충분할 것이다.

지난 6년간 대만 주민들의 본토 여행은 550만건 이상에 달하며 총교역량은 300억 달러를 초과하였고, 해협을 가로질러 6,000만통 이상의 편지와 3,000만통 이상의 전화통화가 오고 갔으며, 적어도 10,000개 이상의 대만 기업체들이 본토에서 80억 달러 이상을 투자 하였으며, 수만명에 달하는 본토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러한 숫자들은 대만 해협 양쪽의 중국 국민들은 서로 피를 나눈 동포들이고 오랜동안 분단되어서는 안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강조하고 있다.

국가통일강령

중화민국(ROC) 정부와 대만 국민들은 중국의 평화적 통일을 진지하게 염원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중화민국 정부는 통일 과정의 청사진인 국가통일강령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양측이

중국의 통일을 촉진시킬 수 있는 원칙 및 적극적 조치들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점진적이고도 순차적인 계획에 따르면 중국의 통일은 영토통일 그 자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중국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 및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도 긴요한 것이다.

북경에 대한 타이페이의 기본정책은 “하나의 중국, 두개 정치체제”로 요약되어 질 수 있다.

1947년 헌법에서 타이페이는 그 자신을 중국의 정통정부로 간주하는 반면에 북경을 중국 본토를 통치하는 정치체제로 간주하였다.

북경은 타이페이에 대해 그와 정반대의 견해를 취해오고 있는 반면, “국가”, “정부” 대신에 “정치체제”라는 중립적 용어를 사용한 타이페이의 구상은 대만 해협을 마주한 정치적 실체를 실용적으로 특성화시킨 것으로 양안이 더불어 살기 위하여 충분한 “창조적 모호성”(creative ambiguity)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두 지역 주민들을 포함하는 민간문제에 있어서는 상반된 법률문제를 해결하려는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중화민국 이등휘 총통이 1991년 5월 1일 행한 ‘공산당 반란 진압을 위한 국민 동원기간’의 종결 선언은 통일을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중화민국 정부의 결정을 의미한다. 그

러나 이러한 우호적 태도에 대해 북경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강령은 중국 통일이 3단계로 성취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는 바, 첫째가 '교류 및 호혜'의 초기단계, 둘째가 '상호신뢰와 협력'의 중기단계, 그리고 셋째가 '협상 및 통일'의 후기단계이다.

이 단계적 접근법은 궁극적 통일이 장기적이고도 험난한 정치적 과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함으로써 선택된 것이다.

중국의 통일은 하룻밤 사이에 성취될 수는 없는 것인데, 이는 양측이 아주 상이한 생활양식은 말할 것도 없고 서로 다른 사회·정치·경제체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단계는 정해진 시간의 틀을 갖고 있지는 않다. 중국 공산정부가 강령에 응해 오는 속도에 따라 다음 단계로의 진입이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에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단계에서 양측은 정치적 실체로서의 상대방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 요망되며 비공식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만 한다.

중국 공산정부는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포기하여야만 하고 대만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충분한 여지를 허용해야만 한다. 불행히도 중국 공산정부는 여태껏 이러한 제안들에 호의적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중기단계의 첫번째 일은 동등한 자격을 기초로 하여 양측 사

이의 공식적 연락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중기단계의 목표는 대만 해협을 가로지르는 직통우편, 수송, 상업적 유대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런 후에 양측의 고위 관리들이 서로 방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단계의 목표들이 달성된 후에야 통일의 과정이 뚜렷이 나타날 수 있다.

후기단계에서는 대만 해협 양측 국민들의 소망에 따라 통일 중국의 웅대한 정치적·경제적 체제를 함께 토의하기 위한 쌍무적 협의체가 수립될 것이다.

평화적·민주적 통일을 이룩하고, 꾸준한 성장을 계속할 중국은 전세계, 특히 아·태지역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조 직]

대만 해협을 마주한 양측의 인적접촉, 간접무역과 투자, 그리고 문화교류는 적절히 다루어져야만 하는 일련의 문제들을 야기시켰는데 그것들은 비공식적 쌍무접촉보다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 본토와의 관계를 다루어 나갈 권한을 가진 일련의 조직들을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1990년과 1991년 중화민국 정부는 3단계의 정부 및 민간부문

조직망을 구성하였다.

1990년 9월 국가통일위원회(National Unification Council : NUC)가 설립되었으며, 그 다음 1991년 1월 행정원 대륙위원회(Executive Yuan's Mainland Affairs Council : MAC)가 설립되었다.

1991년 2월에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인 해협 교류기금회(Straits Exchange Foundation : SEF)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국가 통일위원회(NUC)

국가통일위원회는 고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맡고 있으며 총통에게 연구결과 및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국가통일위원회는 총통이 주임이 되고 행정원장 및 초빙인사가 부주임을 맡는다. 총통은 또한 저명한 민간지도자들을 초빙하여 국가통일위원회에 참석케 한다.

국가통일위원회 멤버들의 임기는 1년이며, 비당파적 위원회로서 중국통일에 관해 여러 이익집단들 사이의 합의를 조성한다.

행정원 대륙위원회(MAC)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중화민국 행정원장 감독하의 공식적인 행정기관이다.

이 기관은 대륙정책에 대한 중화민국 정부의 전반적 계획, 조

정, 평가 및 부분적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대륙위원회는 주임위원에 의해 관할되며 3명의 부주임위원이 있다. 이곳에는 총 180여명 정도의 직원들로 구성된 7개의 처(department)와 4개의 과(division)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륙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의 정부 각료들과 관계 국장 및 위원장들로 구성된다.

해협교류기금회(SEF)

해협교류기금회는 본토와의 관계를 다루기 위하여 정부에 의해 권한이 주어진 유일한 민간 조직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海基會’는, 정부의 공식적 권한과 관련되지만 중국 공산정부가 공식접촉을 거부함에 따라 정부가 다루기에는 부적당한 기술적, 기능적, 기업적 성격의 일만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海基會’는 정치적 문제점들을 다룰 권한은 없는 것이다.

‘海基會’ 기금은 정부 및 민간부문들로 부터 충당되는데 정부로부터의 모든 기금은 대륙위원회에 의하여 예산이 세워지며 따라서 입법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1993년 7월 현재, 대륙위원회는 ‘海基會’에 4,23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였고 1993 회계년도에서의 액수는 770만 달러에 달한다.

[교류현황]

양안간 교역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1992년 양안간의 무역량은 74억 달러에 달하며, 대만으로부터의 수출은 63억달러, 그리고 수입은 11억 달러이다.

1989년 6월 중화민국 정부는 중국본토 상품의 타이완 간접수입을 자유화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래로 양안간의 무역관계에 대해 보다 큰 일련의 자유화 조치가 취해졌다.

1993년 8월 현재, 단지 몇몇 상품만이 본토 수출이 금지되고 있다. COCOM에 의하여 규제된 하이테크 상품 및 희귀동식물 등 103개 품목, 전체품목의 1.3%만이 수출통제하에 있다.

중국 본토에 대한 주요 수출품은 합성섬유, 기계류, 전기 및 전자제품 및 플라스틱 원료들이다.

본토 상품의 수입에 있어서 중화민국 정부는 선정품목 목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3가지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지 않아야 하고, 관련 국내산업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국제시장에서 국산제품의 경쟁력을 북돋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1992년 주요 수입품목은 한약, 모피 및 깃털, 그리고 담배이다.

상호무역의존도가 꾸준히 높아지는 것에 대해 대만 정부는 우려하고 있는데 1992년에는 4.83%에 달하였다. 1992년 본토에

대한 대만의 수출비중은 7.72% 그리고 수입비중은 1.79%에 달하였다.

정부는 중국 본토에 간접투자를 허용하는 4가지 기준을 세웠는데, 국내산업들과의 낮은 연계성, 노동집약적 산업, 필요한 원료의 현지조달, 대만에서 생산이 계속되면 경쟁력이 하락되는 것 등이 그것들이다.

현재 대만 기업인들은 중국 본토의 10,000개 이상의 산업체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

북경 당국은 1992년 말까지 총 89억 달러의 투자를 승인하였으며, 주요 투자대상에는 전기·전자제품, 신발류, 플라스틱제품, 그리고 스포츠용품 등이 포함된다.

중국 본토에서 대만 투자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중국 본토지역은 투자를 관리하는 건전한 법률체계가 결여되어 있다.

많은 대만 기업가들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뒷거래”(영향력 있는 항구 및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쓰는 것)를 해야만 한다. 또한 전력공급, 교통 및 통신 시스템 등 중국 본토의 사회간접자본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은 운영비를 상승시킨다. 금융분야의 경우 본토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얻어내기가 어렵고, 게다가 중국 공산당 정부는 외환 및 무역에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정확한 기업정보를 얻어내는 것 또한 대만 기업가들에게는 큰

입법원으로부터 얻어냈다. '중국개발기금'은 학술회의, 대만에서 본토 학자들의 출판활동, 문화교류, 본토 여론지도자들의 방문 등을 후원한다.

양안관계에 관한 조례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의 주요한 차이점의 하나는 법에 의한 통치가 대만에서 우세하다는 것이다.

중화민국 정부는 중국 유일헌법에 따라 운영되며, 모든 주요 정책들은 관련 법률절차에 따라 수립된다.

중화민국 정부가 본토 및 중국 공산당 정부에 대해 전개해 나가는 정책도 그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법률은 "대만지역과 본토지역 국민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1992년 7월 입법원에 의하여 채택되었으며, 대만 및 본토 사이의 미래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에 틀림없다.

이 조례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통치하에 있는 국민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중국 본토지역에 사는 국민들도 근본적으로 대만 국민들과 동일하게 취급될 것이지만, 대만의 경제적·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정한 예외가 마련될 것이다.

이러한 예외는 중화민국 헌법 제23조의 정신에 따라 마련될 것이다.

아직도 중국 공산당 정부가 중화민국 정부를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대만에 대한 정책 및 태도가 모호하고 모순되어 있기 때문에 중화민국 정부는 아직도 통일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소간의 행동의 자유가 필요하다.

“대만지역과 본토지역 국민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조례”에 중화민국의 행동의 자유를 축소시킬 많은 규칙들이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는 아직도 행정, 민사 및 형사업무를 포괄하는 전체 6장 96조의 규정이 있다.

이 조례는 행정원으로 하여금 양안사이의 주민관계를 다룰 중개기관을 설립하거나 선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조례의 제6조는 중개기관의 중국 본토의 상대측으로 하여금 동등한 자격으로 대만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조례 제77조는 대만 밖에서 모반죄를 범하거나 외국침입을 부추기는 죄를 범한 중국 본토인이 이러한 사실을 입국신청시 성실히 밝힐 경우 처벌없이 대만 방문을 허용하고 있다.

[고왕회담(왕고회담)]

1993년 4월 27일과 29일 사이 권한을 위임받은 민간 중개조직체들간의 싱가포르회담은 40년 이상된 분단이후 양측 사이의 첫번째 접촉이었다.

그 회담은 ‘海基會’ 의장 辜振甫와 ‘海協會’ 의장 王道涵에 의하

사소통 및 대화를 구축하는데 있다.

원칙적으로 그 합의서에는 '海基會'와 '海協會' 의장사이에 정기 및 비정기 회담을 개최하기로 되어 있다.

부위원장 및 비서장은 6개월마다 만나며 부서장이나 임원들은 3개월마다 한번씩 만나 관장분야에 있어서 시의적절한 문제들을 논의한다.

회담장소는 두 지역에서 번갈아 개최될 수 있으며, 필요에 의하여 제3의 장소에서 개최될 수도 있다. 부가해서 양측은 서로 '海基會'와 '海協會' 직원들의 입·출국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하였다.

고왕회담은 타이페이 및 북경간 대화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것으로 궁극적 통일과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홍콩 및 마카오]

중국의 통일에 대하여 말할 때 홍콩 및 마카오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는 그 지역이 중국의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이다.

중화민국 정부는 홍콩 및 마카오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동아시아에서 팔목할 만한 활동영역을 개척하였으며, 중국 본토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하였음을 인정한다.

중화민국 정부는 이들 지역의 권리 및 성과를 보존시키기 위

하였다.

1979년 8월 포르투갈은 중국 공산당 정부와 외교관계를 설립하였고, 마카오는 중국의 일부이며 일시적으로 포르투갈로부터 임명된 총독에 의해 통치된다는 사실에 동의하였다.

1987년 7월 포르투갈과 중국 공산당 정부는 “마카오의 미래에 대한 공동선언”에서 마카오를 1999년 12월 중국에 반환시키기로 합의하였다.

1988년 10월부터 중국 공산당 정부는 “마카오 특별행정구역 기본법”의 초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첫번째 초안은 1992년 3월에 완성되었으며, 1993년 중국 공산당 제8차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승인되었다.

중화민국의 대응

중화민국 정부는 1983년 8월 “홍콩문제 특별대책위원회”(Special Hong Kong Affairs Task Force)를 구성하여 영국과 중국 공산당 정부와의 회담에 대하여 대응하였다.

런던과 북경이 공동선언에 서명한 후 특별대책위원회는 중화민국 행정원 부원장의 직접 감독하의 조정위원회(Coordination Panel)로 승격되었다.

포르투갈이 중국 공산당 정부에게 1999년 12월 마카오를 양

도하기로 결정한 1987년 7월 “마카오의 미래에 대한 공동선언”에 서명한 후, “홍콩문제 특별대책위원회”는 “홍콩 및 마카오문제 대책위원회”로 바뀌었다.

1991년 1월말 중화민국 정부가 행정원 대륙위원회를 설립했을 때, “홍콩 및 마카오문제 대책위원회”는 새로운 조직체인 대륙위원회 “홍콩·마카오처”(Department of Hong Kong and Macau Affairs)로 편입되었다.

홍콩 및 마카오 문제를 논의하고, 두지역에 대한 중화민국 정부의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한달에 한번씩 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중화민국 정부는, 원칙적인 문제로서 정부기관들이 1997년 이후의 홍콩이나 1999년 이후의 마카오로부터 철수하지 않을 것임을 결정하였다.

중화민국 정부는 1989년 3월에 홍콩 및 마카오 문제에 대하여 단기, 중기 및 장기정책 초안을 마련하였고, 1992년 2월 17일 홍콩 및 마카오에 대한 정책(現階段港漫工作方案)을 승인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화민국 정부가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국제적 관심 및 민주주의의 발전을 열렬히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화민국 정부는 이들 지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공적인 일에 참여해 주기를 장려하고 있다.

중화민국 정부는 이들 지역의 자유, 민주주의, 안정 및 번영의 유지와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중화민국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번영의 기치아래 통일 중국을 재건설하려는 노력에 대해 그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하여 홍콩 및 마카오와의 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고 홍콩 및 마카오 동포들에게 서비스를 배가할 것이다.

이것은 홍콩과 마카오에서의 모든 종류의 사업계획을 뒷받침하는 것과 1997년 및 1999년 이후 홍콩 및 마카오에서 중화민국 기관을 보다 발전시키는 토대를 세우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현재의 대만과 홍콩관계 발전이 1997년 중국 공산당 정부의 홍콩 취득을 눈앞에 두고 빛을 잃고 있으나, 점진적인 민주주의의 발전아래 성취된 대만의 안정과 번영의 본보기는 중국 공산당에 압력요인으로 작용하여 홍콩의 자유체제를 유지시켜 나가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대만의 경제적 성공의 본질은 중국 공산당 정부로 하여금 홍콩의 자본주의 체제를 50년간 유지시킨다는 그들의 약속을 지키게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강제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경제적 관계

대만과 홍콩사이의 경제, 금융, 관광 및 수송분야의 교류는 매우 폭넓게 확대되었다.

현재 대만과 홍콩 사이의 상호 무역의존도는 그 전례가 없을 정도이다.

대만은 홍콩의 4번째로 큰 무역대상국이며, 홍콩은 대만과 무역수지의 균형을 이루면서 가장 큰 무역대상이기도 하다.

1992년 대만과 홍콩 사이의 교역액은 172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 천문학적 숫자는 주로 대만과 중국 본토의 간접적 경제관계에 있어서 홍콩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 때문이다.

중화민국 정부는 아직도 중국 본토에의 직접투자 및 무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의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홍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대만의 여행자들은 홍콩 방문객들 중 최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1992년 총 160만명이 홍콩을 방문하였다.

홍콩이 동남아 국제금융 및 무역부분에서 차지하는 긴요한 역할을 고려하여, 중화민국 정부는 “홍콩 및 마카오 교포를 위한 투자 및 무역지원에 관한 필수 강령”과 “해외교포가 대만화폐로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의 금융기관 통제규정”을 공포하였다.

상무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는 극동 무역서비스 홍콩 사무소(Far East Trade Service Inc., Hong Kong Branch Office)를 확충·강화하였다.

1991년 4월, 중국 대외무역개발위원회(China External Tra

- de Development Council : CETRA)는 홍콩에 대만의 무역 센터를 설립하였으며 또한 중화민국 정부는 지방은행들이 홍콩에 지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완화하였다.

정부는 현재 화남상업은행(Hua Nan Commercial Bank), 제일 상업은행(First Commercial Bank), 장화상업은행(Chang Hwa Commercial Bank) 및 중국농민은행(Farmers Bank of China)의 홍콩지점 설치 신청을 승인하였다.

이들 사무소는 홍콩 및 마카오에서 거래하는 대만 기업인들에게 용자를 알선해 줄 뿐만 아니라 홍콩 및 마카오 주민들에게도 은행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IV. 미국의 대북정책*

오 공 단**

* 미·북간 핵협상에 관한 외교협회 발언(1995. 2. 1)

** 미국 랜드연구소 전문연구원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 성인이 된 뒤 미국시민으로 귀화한 사람으로서 북한에 대한 나의 견해를 표명하기 위해 협회의 초청을 수락했다.

나는 랜드연구소에서 국제정책 분석가로서 북한을 연구해 왔다. 오늘 내가 여기서 피력하는 견해는, 미국과 한국의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나의 개인적 견해라는 점을 사전에 밝혀둔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지난 5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 우리는 북한을 테러국가로 규정하고, 북한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북한에 대한 이같은 정책은 두가지 결과를 낳았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지식이 거의 없다는 점과 북한의 행동에 대해 지렛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남한 정부에 대한 우리의 외교정책도 사실 완전히 성숙한 관계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도 강한 미국과 약한 한국이라는 힘의 불균형 관계였기 때문이다.

대신 한국은 종속관계를 수락함으로써 미국의 군사보호 밑에서 생존하고 미국의 경제원조와 교역으로 힘을 기를수가 있었다. 한국은 지난 세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해졌다.

그러나 이런 불평등한 관계 때문에 한국은 독자적으로 외교정책 및 대북정책을 펴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아왔다.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정책을 강대국에 대한 이해관계를 바

탕으로 추진해 왔다. 그 이해관계는 러시아와 중국 공산주의의 봉쇄, 일본의 안보였다.

한국은 미국의 정치엘리트 사이에서 진정한 이익이라고 할만한 독립변수가 되지 못했다. 미국과 소련에 의한 한반도의 분단은 미국의 양심에 그다지 부담을 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인의 마음속에 그저 조그만 영역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에서 핵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평양측과 핵개발 이외의 문제도 논의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북한측의 직접대화를 수용하고, 한반도에 대한 더욱 현실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대화가 북한의 위협으로 시작됐다는 점은 불행했다.

만약 양측이 몇년전에 관계를 수립했다면 북핵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이 뒤늦게 두개의 한국정책을 공식화하자 한국측은 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 통일정책은 하나의 한국이라는 비전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산가족을 찾고 한국을 동북아에서 강대국으로 올려놓으려는 수천만 한국민의 열망을 거부할 수 없다.

미국 국민은 지금까지 꿈을 갖고 살아온 국민이다. 따라서 같이 앉아서 밥과 김치를 먹으면서 아리랑을 부르려는 한국인의 꿈을 이해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통일열망과 미국정책과는 무슨 관계가 있

을까?

한편으로는 自決이라는 도덕적 측면이 있다. 자결이라는 문제는 세계 도처에서 미국민의 동정을 산 바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 측면이 있다. 한국의 통일은 불가피하다. 그것은 6천 6백만 민족의 최대 목표이기도 하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강대국들은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 문제의 일부분이 되거나 해결책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다. 한반도의 정치적 현상유지가 미국의 장기 선택은 아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계속해서 동북아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도이념으로 하는 국가가 출현하는 상황을 지지함으로써 한반도의 통일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남북한 국민 양쪽의 존경과 감사를 얻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미국과 북한간의 합의구조는 핵문제 이상의 것이다. 이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외교정책을 다시 짜야 할 계기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미국과 북한간의 합의구조는 많은 장애물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평양측이 체결했던 협정이 그랬던 것처럼 합의구조는 파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합의이행의 실패가 냉전식 대결로 회귀하는 구실이 되지는 못한다. 우리는 남한과 관련한 일에 아주 오래 간여해 왔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미국보다는 한국과 그 주

변국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무거운 책임을 수반한다. 미국은 북한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단호히 나가야한다.

그 이유는 핵개발 중지에 대한 보상을 하는 데 있지 않고 1백만 군대를 포함해 2천 2백만 국민을 통제하는 정부와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신장시켜야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모든 방도를 동원해 북한의 문호를 개방하는 한편 포위개념을 포기해야 한다. 기업투자나 민간 對 민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대결정책을 포기하고 북한이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멸망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려야만 한다. 효과적인 개입정책은 새 결단뿐만 아니라 새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아시아 특히 북한에 대해 성공적인 정책을 추구하려면 우리는 아시아 문화를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유럽중심의 정책을 아시아에 단순히 확장·적용하거나 미국의 유럽전문가들에게 아시아 문제를 연구하라고 해서는 안된다.

아시아에 있어서 관계의 중요성은 아시아 정책에 대한 미국 정책의 궁극적인 성공이 아시아를 깊이 이해하고 인식하는데 달려있는 것을 의미한다.

V. 한국 - 핵확산금지 분쟁의 볼모*

오공단 / 랄프 C. 하시히

* 국방연구원, 「The Korean Journal of Defence」, 1994 겨울

냉전의 종식으로 한국인들은 조국을 재통일할 기회를 맞았다. 그러나 평양측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전반적인 사찰을 거부함으로써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하고 새 한국전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장애를 만들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운명은 커다란 국제문제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런 게임의 볼모인 셈이다.

북한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IAEA의 핵사찰을 거부하고, 정권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핵개발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이같은 위협은 특히 미국에 부담이 되었다.

이는 한국의 사활적인 이해가 충분히 고려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위협을 적절히 처리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한국에도 중요했다.

냉전의 볼모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약소국가는 인근의 강대국의 영향을 받아왔다. 금세기 한국인들은 평화와 독립의 시대를 기대하면서 일제 36년의 통치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이 냉전을 시작함으로써 한국은 다시 한번 강대국들의 영향아래 놓이게 되었다.

한반도가 워싱턴과 모스크바의 대결로 분단된 이후 남북한 양측은 각각의 정치블록에 충성을 다하는 한 국내문제에 대한 주권행사는 자유로웠다.

북의 김일성 주석과 남의 이승만 대통령과 그 후임자들은 한

반도에 관해 나름대로 비전과 강력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였다. 그 비전은 일관성이 있었지만 미국과 소련의 이익에 반드시 부합하는 것은 아니었다.

외국의 간섭이 없을 경우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을지를 상상하기는 어렵다.

한국 민족주의는 한반도의 통일과 독립을 지킬 정도로 강력했을까?

현대적 다원정치의 경험이 없는 한국이 정당의 난립상태를 무난히 헤쳐올 수 있었을까?

유교적 전통은 독재국가를 초래하지 않았을까?

당시 한국경제 상황은 러시아와 중국의 사회주의체제와 미국과 일본의 자본주의체제 중 어느 쪽으로 적응했을까?

이런 질문들은 강대국이 얼마나 한국의 역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해준다.

우리가 알기로는 냉전중 남한과 북한은 각기 다른 정치 및 경제이념의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냉전의 결과 남한은 번영했고, 반면 북한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

소련이 김일성 주석을 북한의 국가원수로 내세웠을 때 그에게 적절한 역할을 주었다.

그는 민족해방자의 역할을 맡고 나서 그 직책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고, 마침내는 소련측 후원자에게 정치적 독립을 주장

하기 시작했다.

그의 개성과 정치적 감각으로 그는 그가 저지른 소위 ‘조국 해방전쟁’에서 패하고도 살아남은 뒤 권력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갔다.

1955년 김 주석은 주체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및 소련과 연관을 맺고 있던 정적들을 숙청하고 이를 정당화 했다. 주체 사상은 독립과 자조의 사상으로 북한통치에 상당히 유용했다.

원래 주체사상은 소련의 지배에서 벗어나 북한의 독립을 주장하기 위해 내세워진 사상이다. 당시 니키타 후르시초프 공산당 서기장 통치하의 소련은 김주석에게 불리한 정치개혁을 전개했다.

주체사상은 북한에 다른 공산국가들이 신봉하는 사상의 조류에서 일탈하게 하려는 독자적인 정치기류를 갖게했다. 이런 일탈현상은 지난 80년대 말 뚜렷이 나타났다.

공산주의사상의 조류는 당시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을 벼랑의 끝까지 몰고갔다. 불행하게도 주체사상은 세계적인 상호의존을 반대하면서 독립과 자조를 부르짖었다.

90년대에 들어 북한은 소용돌이로 흘러들어갔다. 김 주석은 외부 사조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오는 일을 막기 위해 이전 아시아 지도자의 실책만을 되풀이 상기시켰다.

민족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를 결합한 주체사상은 북한을 현대의 은둔왕국으로 변화시켰다. 북한은 냉전기간중 비교적 고립된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인근 공산국과 비교적 좋은 조건으로 교역함으로써 생존할 수 있었다.

최근 북한은 법률을 개정하고 경제특구를 개방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수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의 영향은 하찮은 것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북한의 독특한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수용”했다. 이같은 수용은 모든 생물체나 사회기관 특히 상대적으로 허약한 존재들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마침내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할 수 없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체하는 이념적 공룡이 되었다. 북한은 동구권 공산국들처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공식적으로 포기하거나 중국처럼 새 현실에 적응하기 보다 주체사상에 더욱 집착했다.

이런 강한 집착은 정권유지를 위한 시도의 일환이었고, 북한의 고립화를 시도한 서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어떻게 한 국가가 국제사회와 관계를 맺지 않고 환경에 적응하지 않은 채 생존할 수 있겠는가? 북한은 국경을 개방하지 않은 채 생존할 수 있겠는가?

북한은 국경을 개방하지 않고 개방의 효과를 얻는 일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력은 무시할 정도다. 북한은 얻고 싶은 바를 얻기 위해 교역할 수 없는 상황이며 개발할 인적 자원이나 천연자원도 없다.

그러나 북한이 갖고 있는 것은 잠재적인 핵무기 개발 능력이다. 그래서 평양측은 최근 몇년간 이 핵카드를 쓰려고 노력

하고 있다.

협상거리로 등장한 핵위협

핵무기는 확실한 물건이다.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와 비교해 더 파괴력이 있으며, (같은 양의 재래식 무기에 비해) 숨기기 쉬우며,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해 운반할 수도 있고, 또한 신비한 매력을 갖고 있다.

핵무기는 상당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느 국가가 이를 갖고 있다고만 해도 그 자체로서 억지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국제정치의 약점을 보충하기 위해 핵카드의 사용을 바라고 있다. 이는 대단한 흥정이다. 여하튼 고립되고 파산을 맞은 국가가 정치적 생존을 위해 핵개발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이 핵개발을 시작한 동기를 다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같은 결정은 북한이 한국을 포함한 핵무장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상황을 감안하면 당연하다.

전략핵 우산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에는 미군의 전술무기가 있다. 이스라엘, 이라크, 파키스탄 같은 분쟁지역의 국가들은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국가들의 핵보유는 북한의 핵보유 만큼 각별한 관심을 끌지는 못한다.

평양측에 대한 압력의 상당 부분은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의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소련은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의 NPT 가입을 조

건으로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북한은 회원국이 된 지 7년만에 미국의 압력으로 IAEA에 사찰의 길을 여는 핵안전 협정에 마지못해 서명했다.

동시에 미국은 일본측에 핵문제가 투명해질 때까지 국교정상화를 서두르지 말라고 경고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의 이같은 태도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문제를 강력한 협상거리로 삼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핵위협은 두가지 면에서 정치적 카드로서 특히 유용했다.

첫째로 이러한 위협으로 다른 나라는 상당한 정도로 이를 인식하게 됐다. 그리고 이런 위협은 처리하기가 어려운 것이었다.

두번째로 북한의 핵위협은 국제사회가 핵무기 확산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면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말았다.

위협의 인식

북한의 핵개발 잠재력은 클린턴 행정부가 대처해야 할 최고 외교정책중의 하나가 됐다.(기능적으로 과연 핵무기를 보유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도 논란중임)

일본의 94년 방위백서도 북한의 핵위협을 제일로 꼽았다. 어떻게 핵무기를 보유할 의사도, 개발할 의사도 없다는 국가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 위협을 줄 수 있는가?

이는 위협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분명해진다. 사전은 두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한편으로 위협은 “위해를 가할 의사의 표

현”으로 정의된다. 이는 위해가 앞으로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정의로 본다면 북한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북한은 핵무기로 어느 나라도 위협하지 않았고, 핵무기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인했다. “임박한 위협의 암시”라는 다른 한편의 정의는 좀 모호하다.

암시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이는 인식의 문제를 야기한다. 위협대상자의 관점에서는 위협은 심리적 해석이지 객관적 상황이 아니다.

핵무기는 그 자체로는 반드시 위협적이지는 않다. 구 소련의 4개 공화국은 수천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핵무기들은 북한의 핵무기 하나만큼 미국 정책입안자들에게 위협적이지 않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보유했다고 알려진 수백개의 핵무기는 별다른 관심을 끌지 않는다.

이처럼 위협의 인식은 실제로 근거가 있지만 위협의 대부분은 자가발전적이기도 하다. 만약 위협이 어느 정도 우리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어떤 상황이 다른 상황보다 더 위협적이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핵억지에 관한 논문은 이런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왜냐하면 잠재적 침략자에 대한 위협을 불식하는 일이 핵억지국가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용할 의사와 함께 핵무기를 보유했고 이를 이성적으로 통제하고 처리할 능력이 없다면 정도의 위협적 존재로 인식될 수도 있다.

북한은 핵위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 국가는 위해를 가할 능력이 없다고 인식되면 위협적 존재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이 완전한 무기가 아니더라도 핵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게 공통된 견해다. 한 국가는 무기를 사용할 의사가 있을 때 주목을 받아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한 적은 없지만 한국, 미국 및 일본에 대한 북한의 적대적 태도는 이런 의도를 추론할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

핵무기는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미국 및 동맹국에 적대적인 당사자가 이런 무기를 보유할 수도 있다.

핵공격은 자멸을 초래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도 이성적으로는 핵보유국이나 다른 핵보호국가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미국은 그같은 보복을 하겠다고 북한에 경고해 왔다.

국제정치에서 국가의 행동은 이성적인 것으로 상정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김정일 총서기를 비롯한 지도부는 비이성적 행위를 하기 쉽고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가 이성적 통제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학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위협은 거기에 바쳐진 시간에 비례해서 늘어난다. 위협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라진다.

미국 언론은 핵문제가 흥미를 자극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최근에 알았다.

그러나 보스니아사태, 아이티사태, 이라크사태가 언론의 관

심을 끌면서 구소련 공화국의 핵확산 위협이나 북한의 핵위협은 점차 미국인들의 눈에서 사라졌다. 더 큰 위협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작은 위협은 사라진다.

북한의 핵폭탄 한두개는 북한측이 핵폭탄 5개를 가졌다는 가능성이 제기될 때까지 위협적이었다. 위협은 주관적이다. 그래서 위협에 대처하는 일은 주관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위협의 인식은 그 원천을 알아내기 위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일부위협은 내용도 없이 부풀려진 경우로 판명될 수도 있다. 다른 위협은 변화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에서 비롯할 수도 있다. 일부 위협은 아직도 객관적 상황에서 올 수도 있다.

핵위협의 여러 측면

핵위협은 다각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카드를 협상 잠재력을 갖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의미를 지닌다.

각국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있다. 직접 관련된 각국의 이해관계는 대략 다음의 4가지부류로 나누어진다.

즉 (1)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 (2) 동북아 지역 및 전세계의 핵확산 방지 (3) 동북아의 지역에 대한 국가적 영향력 향상 (4) 국내의 정치 및 사회안정의 확보 등이다.

이런 이해관계가 핵분류 당사국의 공통 사항이지만 상대적인 중요성은 나라마다 다르다. 한가지 사항에 유리한 조치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다른 이해관계에 불리하다.

힘은 다른 나라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면서 일부 나라의 영향력을 증대시킨다. 힘은 군사행동에 참여하는 주체와 행동의 결과에 좌우된다. 국가이익의 표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미국은 지역 및 전세계의 핵확산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지역 안정의 유지와 관련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려 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미국은 북한 핵과 북한의 재래식 공격을 막아 한국과 일본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북한 내부에서 자멸로 가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워싱턴의 핵확산금지정책은 NPT를 유지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IAEA의 사찰을 수락하도록 북한의 동의를 받아내는 한편 북한이 탈퇴의 선례를 남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핵확산 방지의 다른 목표는 북한의 핵확산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데 있다.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가장 영향을 받는 나라다. 그렇지만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관리들은 한국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한국의 최대 관심은 북한과 다시 무력충돌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다.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이와 함께 한국은 통일을 추구하는 한편 통일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유수한 국가가 되는 날을 준비해야 한다.

국내적으로 김영삼 정부는 정치에서 군부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쟁위협을 삼가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민의 일부가 북한에 적대적인데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 전후 세대의 상당수는 구세대처럼 북한을 위협적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런가하면 일부 학생 세력은 친북한 성향마저 지니고 있다. 일본은 앞으로 미국의 동맹국이자 이 지역의 군사 및 경제강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이 지난 1993년 5월 일본 서부 지역에 닿을 수 있다고 알려진 노동1호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을 때 일본은 북한의 핵위협을 본격적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조총련이 상당액을 북한에 기부하는 관계로 일본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고, 앞으로 전후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북한간의 적대감은 깊다.

북한은 일본을 군사적으로는 미국 깃발을 달고 있는 격침할 수 없는 항공모함으로 간주한다. 일본은 핵국가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일본은 외교정책과 관련해 미국에 덜 의존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만약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다면 핵억지와 미사일 공격대처 기술면에서 미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일본은 지역 및 전세계의 핵확산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일본은 이 지역에서 대만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비핵국가가 된다. 그렇게되면 일본은 핵무기를 갖으려고 할 것이며, 이럴 경우 과거 일본의 침략을 기억하고 있는 인근 아시아국가는 공포를 갖게 된다.

핵확산이 북한에서 중동지역으로 퍼질 경우, 이는 새 중동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일본의 석유공급을 위협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평화헌법은 일본의 대북제재 및 집단 방위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가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경 당국은 새로 출범한 김정일 정권에 그다지 지지를 보내지 않는 가운데 북한의 공산주의 정부형태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경제성장을 계속 추구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안정유지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이와 함께 미국의 영향력 확산을 막으려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계기로 솔직한 중재역을 담당함으로써 정치적 위상을 높일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회는 양날의 칼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문제의 이성적 해결을 거부하거나 이 지역에서 분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점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결에서 어느 쪽을 지지해야 하느냐 고심을 해야하는 처지가 된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는 최저 수준이다. 두나라는 지난 1961년 체결했던 우호조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조약은 북한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러시아의 개입을 규정하고 있다.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이 조약이 실질적으로는 효력을 잃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에는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이 아직 있다. 러시아는 북한이 비핵화를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이럴 경우 한반도의 분규를 단기적으로 끝낼 뿐 아니라 모스크바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완화시키기 때문이다.

모스크바측은 현재 서울과 평양 모두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동부 러시아의 발전은 한국, 일본 및 미국의 잠재적 투자와 좋은 경제관계를 맺는데 달렸다.

러시아는 NPT체제의 유지를 바라고 있다. 왜냐하면 구 소련에 속했던 다수의 공화국이 러시아에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 증대를 바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는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8개국 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위협에 대한 반응

평양측이 전면적인 핵사찰을 거부한데서 생긴 분란을 어떻게 처리할 지는 분명치 않다. 서울측이 대북정책을 펴나가는 문제와 관련해 평양측이 좀 당황하고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북한의 핵도전에 대한 반응의 틀은 9개 대안이 행렬을 취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해결노력은 일방적, 다각적 또는 정권적 반응과 개입, 분규, 또는 고의적인 무시에 기반을 두고 진행될 수 있다.

핵확산이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북한이 NPT 가입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도는 IAEA로 하여금 북한을 상대하게 하는 것이다. IAEA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국제협약처럼 NPT는 여러 문제에 대한 견해의 타협이다. 이런 타협성은 NPT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다.

IAEA는 회원국의 주권존중과 사찰의 필요성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IAEA는 이밖에도 제한된 인원을 가장 협의가 있는 국가에 집중하는 가운데에서도 안전감시에 있어서의 비차별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IAEA는 회원국의 핵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동시에 핵위협이 어느 정도인 지를 다른 나라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일부 국가는 핵무기보유를 허용하고 다른 국가는 이를 금지하는데서 원칙상 흠은 있다.

핵보유국들은 IAEA가 핵경찰이 아닌 경고기구로서 활동하도록 하는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여러가지 이익을 챙기려하고 있다.

조사반이 일부 국가가 핵물질을 무기제조로 전용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을 때 IAEA는 다른 NPT회원국과 유엔에 이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 이런 통보는 이라크의 경우 이루어지지 않았고, 북한의 경우 이루어졌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IAEA는 이런 계획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릴 권한이 없다.

IAEA가 내릴 수 있는 몇가지 제재들은 (1) 북한이 NPT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낸 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이를 유엔안보리에 보고한다 (2) 민간 핵개발 계획에 대한

IAEA의 지원을 중단한다 (3) 북한을 NPT에서 추방한다 등이다.

다른 추가 조치는 유엔이나 유엔과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한 두 국가가 내려야만 한다.

1995년의 NPT 연장회의에서 각국은 제한 연장이나 무기한 연장이냐를 결정해야 한다.

이 조약은 다음의 경우 별로 가치있는 안전장치가 되지 못한다.

즉 (1) 여러 국가가 무기한 연장에 뜻이 없는 경우 (2) 비핵 국가가 NPT 준수와 관련해 속임수를 쓰는 경우 (3) 핵보유국이 핵무기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등이다.

NPT 회원국이라는 사실은 인근 국가가 핵확산 방지를 위반했거나 핵보유국일 경우 가장 매력없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의 보호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도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했다는 두가지 이유에서 핵무기개발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만약 북한이 NPT에서 탈퇴하거나 핵개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NPT에 머물러 있다면 이 지역의 각국 정부는 NPT의 무기한연장에 반대할 정도로 NPT를 무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런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IAEA 회원국들은 핵안전 준수와 관련해 IAEA가 조기에 적절한 경고를 낼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하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있다. 이런 주장은 IAEA가 사찰에서 주제넘게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북한의 요구와 상치한다.

IAEA는 북한 핵문제를 술선해서 처리할 권한이 있다. 그런데도 핵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책임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고 나섰다.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북한은 IAEA가 북한을 불공평하게 다루어 정통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면서 IAEA와 논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IAEA가 특히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불모라고 불평하면서 미국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전략은 두가지 이유에서 일리가 있다.

첫째로 평양측은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기관과 분규를 빚고 싶지 않다. IAEA는 제재를 시작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반대보상을 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NPT를 준수하고 “보상”을 받아 내리는 북한은 관심을 미국쪽에 돌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측 협상진은 싫든 좋든 미국이 IAEA의 실제 배후세력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북한이 전면 핵사찰을 받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미국의 대북한정책

한반도의 장래는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상당한 정도로 달려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각종 문제에 대처하면서 유약하고 일관성없는 외교정책을 지시했다고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비난의 상당 부분은 클린턴대통령의 선거공약과 취임초기의 발언에 상당한 기대를 했기 때문이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유엔과 협조하면서 활기찬 다각외교를 펼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 클린턴 대통령의 실패는 다루기 어려운 문제를 시도한 데서 비롯한다.

그는 북한의 핵정책과 관련해 경솔하게 그 정책을 바꾸어 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에 지렛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대다.

비핵국가가 사방에서 위협을 받고 있을 때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한 것은 불행이다. 그는 이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이 NPT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면 북한 핵확산을 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선제공격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곧 알아차렸다. 그런데 이런 선제공격은 전면전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이 전쟁에서 이길 경우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최종적 해결을 얻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한국에 너무 가혹하고 미국에도 심각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공격 가능성을 배제한 뒤 3가지 선택을 갖게 됐다. 그것은 경제제재, 정치 및 경제적 유도, 인내를 갖고 기다림 등이었다.

인내를 갖고 기다림은 미국의 특성이 아니었고 경제제재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은 - 진 커크페트릭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의 말을 빌리면 - 커다란 당근을 들고 조용히 걷는 정책을 선택했다. 이 정책의 단점은 핵협박을 들어주었다는 선례를 남겼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결방도는 오직 매력없는 것만 있었다. 미국은 그중 한 방도를 얼마간 추구한 뒤 또 다른 것을 추구했다. 즉 제재와 보상을 번갈아가는 방법을 구사했다.

미국이 북한을 아는 정도보다 미국을 더 잘 아는 북한은 협상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고, 핵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 북한이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게 됐는지 또는 손해를 입었는지는 별도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한국의 대북한 정책

클린턴 대통령처럼 김영삼 대통령도 북한에 비효율적인 정책을 펼쳤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

그 부분적인 이유는 그의 대북정책은 자주 워싱턴의 발표가 나온 뒤 이에 대응하는 식이었기 때문이었다.

전임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정책으로 이룩한 업적은 따라가기 어려웠다. 그 업적이란 공산권 거의 전부와 외교관계 수립, 유엔가입, 북한과의 비핵화공동선언 체결 등이다.

노 전대통령의 업적이 급변하는 국제환경의 산물인가 아니면 세심한 외교의 결과인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북한과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 협정에의 서명과 이행은 별개의 문제다. 북한과 맺은 협정을 살릴 수 있는 여부가 김대통령에게 떨어져 있다.

김 대통령의 정치개혁은 한국에서 새 정치판도를 구축했다. 김영삼 정부가 외교정책을 펼치는데서 부딪치는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민주국가 정부와 관련있는 것이다.

정치 현실론자들은 국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하는 외교정책을 더 좋아한다.

그런데 이런 정책은 미국의 대 베트남, 대 이란-콘트라 정책에 서 보듯 비현실적으로 드러났다.

한국 외교정책의 여지는 미국 것보다 더 제한을 받고 있는데도 이해집단간의 균형과 협조문제는 아주 복잡하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한국은 3가지 과제를 갖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NPT를 지지하는 한편 미국 및 기타 국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통일의 방향으로 나가면서 통일 한국에 대비해야 한다. 국가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

한국은 이런 일을 처리해나가면서 한국 국민과 미국 정부라는 두 지지세력의 요구를 잘 깨달아야 한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외교정책과 안보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런 과제가 여러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시행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해결을 위한 구조

미국과 북한은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 북한 핵문제는 한국, 북한,

일본 및 미국이 좀 더 협력관계로 갈 수 있는 길을 막아왔다.

협정의 규정은 잘 알려졌다.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미국은 북한에 1천메가와트 경수로 2기와 중유 50만톤을 제공할 국제 콘소시엄을 주도적으로 이끈다.

중유는 북한이 흑연로 건설을 포기함으로써 입은 전력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과 북한은 투자 및 무역 장벽을 낮추는 한편 각각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외교관계를 대사급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북한은 이밖에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약속도 받아들였다.

북한은 경수로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흑연로와 그 부대시설의 작동과 건설을 중단한 뒤 이를 해체한다. 50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이미 꺼낸 핵연료는 재처리하지 않는다.

북한은 NPT 회원국으로 남아 핵시설에 대한 정기 및 특별사찰을 받고 경수로의 중요부품이 인도되기 전 IAEA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찰을 받는다. 이는 협정이 제대로 진척될 경우 협정 서명후 5년 뒤의 일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남한과 대화를 시작한다. 관계자들은 당사국의 손익의 관점에서 협정을 분석한다.

미국 행정부는 - 클린턴 대통령, 북한과 협상을 이끈 로버트 갈루치 핵대사 등 주요 인물은 - 이 협정을 성취할 수 있는 최

선의 타협이었다고 주장했다.

한국, 일본, IAEA의 공식 반응은 열광적이지는 않았지만 지지하는 쪽이었다.

협정의 내용을 비난하기는 쉽다. 북한이 두개의 핵시설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했을 때 핵문제는 중요성을 더해갔다.

그렇지만 특별사찰은 적어도 5년간 연기됐다. 5년의 유예기간 동안 북한은 NPT에서 특별자격을 받는다. 이는 다른 핵개발국가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북한경제의 붕괴를 고대하던 사람들은 실망했다. 미북간의 핵협정은 경제제재를 막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금수조치의 가능성을 없애는 한편 북한에 대한 외교적 인정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협정의 지지자들은 북한의 플루토늄 개발계획이 중단된 점을 지적한다. 이와 함께 협정이 살아있는 한 5메가와트에서 꺼낸 핵연료를 무기로 재처리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한다.

물론 이 협정은 북한이 밀수나 비밀 우라늄 농축작업 등을 통해 핵물질을 얻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플루토늄 획득은 당분간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제네바 협상과정에서 외교정책의 수립과 관련해 교훈을 얻었다. 워싱턴측은 갈루치 대사와 협상팀이 다른 당사국 정부와 자주 접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클린턴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전화통

화를 했고 한승주 외무장관이 몇차례 미국을 방문했는가하면 한국 대표단은 제네바에 머물면서 상황을 상세히 파악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로 한국과 진솔하게 협의했는지를 알 수 없다.

미북간의 서명이 있기 전 김 대통령은 미국의 협상방식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또 한 장관은 북한이 핵지원을 받기전 핵의혹을 불식해야 한다는데 조금의 유연성도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양측은 결국 이 협정을 수용하고 말았다. 미국은 다각적 외교를 추구하겠다는 클린턴 대통령의 정책을 포기하면서 협상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미국이 국제조약을 위반하도록 북한에 허용하는 협상을 떠맡았다는 점은 특이하다. 미국이 협상의 핵심인 경수로와 중유의 비용을 다른 나라가 지불하도록 했다는 점도 특이하다.

IAEA나 경수로 건설비용을 대는 주요 국가들은 이런 식으로 핵문제를 처리했다. 자금제공 국가중 한국은 비용, 기술, 건설의 대부분을 담당하며 일본은 나머지 비용을 낸다.

그러나 협상 과정이 남긴 선례는 그다지 고무적이지 못하다. 중동지역에서 미국은 이스라엘과 아랍간에서 중재역을 자주 맡아왔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협상 그 자체를 진행한 셈이다.

협상에서 최종 점수를 따지듯이 핵협정을 너무 좁게 평가하는 일은 실수일 수도 있다. 이 협정은 미국과 북한간의 미래관계를 위한 강령으로 볼 수도 있다.

매 단계마다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는 다시 재협상해야 하고 이런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 북한 및 일본은 집중적인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자금제공국의 자격으로 한국과 일본은 초기 협상 때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공화당이 의회선거에서 승리한 상황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일본과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에 경수로 지원비를 제공하겠다는 선택권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다.

북한은 미국하고만 거래를 해야 할 입장이다. 그렇지만 경수로를 건설하려면 실제로 남북한 간에는 광범위한 인적 교류가 필요하다.

아마도 미국과 북한간의 제네바협정은 당사자들이 핵위협을 뒤로 하게 했다는 데서 최대의 장점이 있다.

협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한 앞으로 몇년간의 협상에서는 교역, 원조, 외교, 상호 관심사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된다. 북한 측은 대화를 원할 수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마도 그들은 돈을 받아서 주체 사회주의라는 불가능한 꿈을 계속해서 추구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이 협정은 북한이 문호를 대외에 개방하도록 하고 핵위협 문제를 점차 시들해지도록 하는 한편 한국에는 북한과 바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될 것이다.

결 론

만약 한국이 외교정책에서 좀 더 독자적인 노선을 선택한다면 안보를 위해 좀 더 많은 책임을 떠맡아야만 한다. 서울측은

이렇게 할 정치적인 기술과 경제 및 군사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런 책임의 인수에는 미국과 맞서기 위한 새로운 자신감과 의욕이 필요하다.

만약 일본이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을 줄이고 평화헌법을 개정한다면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중국과 함께 현재의 미국 안전보장을 대체할 다자안보관계를 발전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한국은 외교정책 수립과정에서 좀 더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스스로 여러 가지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이점을 갖게 된다.

그리고 한국측은 미국이익의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국제, 국내, 국가이익의 순서를 매길 수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무척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 중국과 협력에 핵문제 해결에 관한 제의를 내놓는다면 미국은 이런 제의가 자체 정책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따라갈 지도 모른다.

서울측이 새 북방정책을 추구하기 전에 워싱턴과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새롭고 독자적인 서방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이 큰형 더 나아가 아버지처럼 행동하는 현재의 관계는 과거에는 잘 나갔고 이 때문에 두나라는 각각 혜택을 입었다.

“고장나지 않으면 고치지마라”는 주장도 있다. 그렇지만 파국의 한계점에 이르지말고 긴장의 조짐이 나타나면 초기에 관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게 반대주장의 논리다.

한국과 미국간의 관계는 특히 젊은 세대가 조국에 대해 긍지를 가지면서 예전처럼 잘 나가지 않는다.

한국은 비상시기에 나라를 보호해 준 미군에 감사를 표시하면서도 점차 미군의 한국 주둔을 변칙 내지는 모욕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베트남전의 실패를 시작으로 국제문제를 관리하는 미국의 의무와 능력에 대해 회의감이 높아가고 있다.

공산권이 무너지고 경제전쟁이 치열해지는 시기를 맞아 상당수 미국인들은 국내자원을 국내문제로 돌리고 전세계의 여타 지역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바라고 있다.

그러나 옛 관계는 부수기가 어렵다. 미국과 한국의 경우 독립적인 관계는 전통에 어긋난다. 한국은 역사를 통해 볼 때 과거나 현재를 막론하고 의존적 관계에 더 익숙해있다.

반면 미국은 각국 중 최고라는 의식에 젖어 있어 각국과 협력 하기보다는 고통에 빠진 친구를 구조하려 할 것이다.

한국은 전보다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펼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을 입을 수도 있다. 한국은 대단한 열기를 가지고 독자적인 국익을 추구할 입장이 된다.

북한이 한국정부를 미국의 불모라고 보는 인식도 흔들리게 된다. 이런 상황은 남한과 북한간의 적법한 대화를 더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최대의 혜택은 김영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북한 뿐만 아니라 국내의 사회 및 경제 문제를 다루는 한국 정부의 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소에서 비롯할 수도 있다.

한국 정부는 좀 더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수용함으로써 한국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의 존경을 얻을 수 있다.

VI. 북한의 권력변동과 미국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

오 공 단

* Dr. Joseph Nye를 위한 브리핑 자료(1994. 8.23)

1994년 7월 8일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이 사망했다. 최근 수년동안 김일성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그는 82세였다) 돌연한 그의 사망은(전하는 바에 의하면 “정신적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 서방세계 사람들을 최소한 놀라움에 사로잡히게 했다.

오랫동안 북한분석가들간에 논란이 되어온 김일성의 권력승계에 관한 의문들은 이제 새롭게 긴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의 아들이자 예정된 후계자인 김정일이 유일 지배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가 집단지도체제속에서 권력을 분점할 것인가? 그가 권력을 오래 장악할 수 있는 지지자들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가 군사적인 강경론자인가 아니면 개혁의지를 가진 온건론자인가? 그는 핵선택권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그의 정권유지의 지주로 계속 움켜쥐려 할 것인가?

북한은 상대적으로 폐쇄된 사회이고 미국은 북한정권을 고립시키는 쪽을 선택해왔기 때문에, 북한의 장래 정책에 관한 중요한 의문의 대부분에 대해 대답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북한에 관한 우리의 의문들은 몇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상당한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예측할 수 있는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는-대답할 수 없는 의문들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서-대북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김정일체제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한 것은 상당히 믿을만 하다. 북한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는 모든 매체들이 그가 통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는 북한에서의 어떤 분열이나 의견대립에 관한 소문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김주석의 사망이 즉각적인 권력투쟁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가장 최악의 권력승계 시나리오는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계획했던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리라는 영문을 알 수 없는 징후가 있다

즉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는 아직도 그의 아버지가 장악하고 있던 정부와 정당의 최고 직책인 주석직과 총비서직에 지명되지 못했다. (그는 이미 군 최고사령관직을 보유하고 있다)

몇 주전 서울에 체류하고 있을 때, 나는 이러한 권력승계 지체문제에 대하여 한국동료들과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다.

한국에서는 3가지 가설이 일반적인 경향이였다.

첫째 가설은 김정일이 주석직을 승계하기에는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이 없어서 거나, 또는 본인의 결함에 대한 자의식 때문이거나 (그는 대중들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고, 대중연설을 한 적이 없다) 또는 위태로운 건강때문에 의도적으로 승계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가설은 다른 권력자들이 주석직과 총비서직중 하나 또는 두 자리 모두를 승계할 만한 김정일의 능력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암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셋째 가설은 김정일이 적당한 경축일-아마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창건일의 행사-에서 하나 혹은 두자리 모두를 떠맡을 충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승계를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20년간의 권력승계 준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 생존시에 권력승계 계획을 세우는 것과 그가 사망한 후에 실제로 이를 이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김일성은 분명히 그의 아들에게 튼튼한 국가를 넘겨주고 싶었을 것이며, 따라서 북한의 국운의 지속적인 퇴보는 권력승계 과정을 뒤틀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우리를 놀라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기적을 행하는 자로 알려진 적은 없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는 그의 아버지가 부여한 합법성의 우산 아래에서 수년동안 국가의 일상적인 업무들을 지도해 왔다고 하며 그래서 지금까지 그는 해결사였다기 보다는 문제를 분배하는 일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의 죽음이 용단을 그 아들의 발아래에서 끌어 당겨버릴지 아니면 그 아들이 이제 나라를 구하기 위한 그 나름의 개혁정책을 공식화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될지 전혀 모른다.

김정일의 선택: 현상유지 혹은 개혁; 핵폭탄 혹은 국제협력

한국과 일본에서 행해진 여론조사에 의하면,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이 북한의 생존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은 온건한 개혁을 추구할 것이라는 것이 강하게 일치된 여론이다.

지난해에 북한측은 처음으로 그들의 경제난을 인정했다.

북한경제가 과연 구제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북한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정치적, 경제적 혁명이 필요할 것인가가 북한 분석가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제적 성공은 북한의 안보 뿐만이 아니라 김정일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사활적인 것이다.

그는 권력을 유지시켜 줄 아버지의 정통성이나 업적(1980년대까지의 경제적 업적을 포함해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는 인민들을 먹여 살리든가, 아니면 북한에 종말을 가져다 줄지도 모를 위협스러운 군사적 모험에 열중하든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에는 그것이 북한이 경제를 회복시켜 독립국가로든 연방국가로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귀착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의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댓가로 핵무기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할지 안할지 여부는 거의 차이가 없는 이슈이다.

김 정권이 핵선택권을 포기할지 아닐지는 대답할 수 없는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이 문제는 사실상 국제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유일한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평양이 IAEA의 전면적인 사찰을 받아들일 것인

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보다는 훨씬 더 폭이 넓다.

아마도 북한은 편집광적이기 때문에 핵선택권도 보유하고, 국제적인 승인과 협력과 원조도 동시에 획득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편이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두개의 선택권은-특히 미국에 의해서-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평양측으로서는 가능한 한 핵카드를 보유하다가 어느 정도 미국에 대한 신뢰가 증진된 뒤에 그것을 버리려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북한측 협상자들이 내놓은 약속들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신속한 해결 보다는 지루한 게임을 예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궁극적인 해결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쌍방은 뒷걸음질치거나, 걸음을 잘못 내딛는 경우가 흔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황은 여전히 실망스럽고 위협할 것이다.

만약 이 시나리오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지금은 북한의 편집병을 몰아내는 일을 보다 빨리 진척시켜 나가기 위해 핵문제와 승인 및 협력문제와의 연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시점이다.

북한에서의 정치집단들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단일체제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 미국의 정치시스템과 비교해 본다면 그것은 아마 옳은 성격규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에도 서로 다른 정치집단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우

리가 그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다.

최근년간에 김달현, 김용순, 강성산과 같은 “개혁파”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가운데 북한의 경제정책이 왔다 갔다 한 것은 통치권 안에서 진행되는 정책논쟁을 입증한다.

우리가 김정일에게 가하여 지고 있는 다양한 압력들의 상대적 강도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일차적으로 그는 개혁파들과 더불어 성장해왔고 또한 그들로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개혁에 접근할 수 있다.

북한에 개혁파가 존재한다는 것은, 핵대결을 종식시키고 북한의 개혁을 고무시켜 미국의 지역적, 세계적 안보이익에 부합되도록 하는 데에 그들의 존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VII.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장벽의 정치적 의미*

오공단 / 랄프 C.하시히

* 미시간 주립대 아시아연구센터, 「It's Political and Economic Future」, 1993

1990년 1월 1일, 북한 사람들은 군사분계선(MDL) 남측에 거대한 장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이 장벽은 남북한에 의해 공동으로 축조된 것이다.

1978년에 남한측은 군사분계선 일부지역에 일련의 대전차장애물을 설치했다. 1990년 신년사에서 김일성주석이 이들 대전차장애물을 장벽으로 변형시킨 것이다.

김일성의 연설은 북한 언론계에 수 개월간에 걸친 장벽철거 캠페인을 불러일으켰다.

그 이후로 장벽문제는 간간이 북한의 뉴스기사에서 취급되기는 하였지만 김 주석의 신년사에서든 재론되지 않았으며, 점점 시야에서 사라져 갔다.

만일 장벽이나 장벽과 아주 흡사한 무엇이 바로 김일성 정권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만 아니었다면, 장벽캠페인은 북한 연구가들에게 있어서 단지 스쳐 지나가는 흥미에 불과했을 것이다.

장벽은 북한정권이 직면하고 있는 점증하는 문제, 즉 외부세계에 국경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에서 자기 인민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상징인 것이다.

장벽선전 캠페인의 간략한 역사

1970년대 말에 남한은 1950년에 북한이 저지른 바 있는 전격전의 再發을 막기 위해 군사분계선 남쪽에 대전차장애물을 설치했다.

북한의 선전캠페인에 따르면 그 장애물들은 10년 이상 전적

으로 무시되어 왔다.

남북한 양측 사이에 개인적인 방문이나 전화나 편지를 교환하기 위한 아무런 장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간에 상호 왕래가 없는 것이 장애물 탓이라고는 양측 어느 쪽도 생각하지 않았다.

가시철조망 울타리와 지뢰밭과 그리고 경계선 양측을 정찰하는 重武裝 군인들만으로도 자유통행의 충분한 장애물이 되어왔다.

1989년 베를린장벽의 붕괴는 남한사람들로 하여금 가족방문, 사업, 관광 등을 위한 자유여행을 허용하기 위해서 그들의 분계선을 개방하는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하도록 고무시켰다.

1989년 남한의 노태우 대통령은 통일을 향한 한 단계로서 남북한간에 제한적인 여행을 허용하자고 제의했다. 이러한 제의는 1972년 동서독간에 채택된 것을 본뜬 것이다.

물론 북한당국은 그들 주민들이 남한으로 여행하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었다.(북한 주민들은 심지어 자기 나라안에서 여행하는 것 마저도 제한받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관계당국은 이 제의를 봉쇄할 수 있는 수단, 가급적이면 베를린장벽의 철거를 둘러싸고 자기측 선전에 다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찾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어느 한 재간있는 사람이 김주석으로 하여금 남한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라는 劇的인 호소를 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분단을 끝장내고 나라를 통일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더 절박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통일을 바라는 모든 인민들의 열망과 절절한 염원을 반영하여 북과 남사이의 장벽들을 부수고, 상호 자유방문을 실현함으로써 북과 남을 전면 개방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비무장지대 남쪽에 있는 콘크리트장벽은 무엇보다도 먼저 철거되어야 합니다.

— 해외방송정보서비스[FBIS], 1990.1.2, p.11

장벽캠페인은 잇달아 두개 방향에서 교묘히 창출되었다.

첫째, 장벽의 철거가 남북한 사이의 여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되었다.

물리적 의미에서는 마치 그 장벽을 타넘지 않으면 남북한을 여행할 수 없는 것처럼 묘사하면서, 정치적 의미에서는 남한당국이 그 장벽을 허물 의지가 있는가가 그들의 통일대화의 열망에 대한 리트머스시험지라는 것이다.

둘째, 장벽의 물리적인 재원이 북한군 장성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그에 의하면 그것은 “군사분계선 전체(240km)에 걸쳐 있으며, 바닥의 폭은 10-19m, 꼭대기 폭은 3-7m, 높이는 5-8m”이고, 평지 뿐만이 아니라 “가파른 산악지역”에도 축조되어 있다는 것이다. (FBIS, 1990.1.12, p.14)

장벽캠페인은 남한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처음에 그들은 장벽의 존재를 부인했다. 그 때 그들은 그것이 저지대에 설치된 일련의 대전차장애물이며, 설치지역도 단지 분계선의 12%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캠페인을 통해 맹렬히 공격을 퍼부었다. 그들은 장벽의 존재에 대해 목격자의 증언을 인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려진 바에 의하면 이들 목격자중 어느 누구도 그 장벽이 수 마일 이상에 걸쳐 존재하고 있는지를 확정하기 위해 한국을 횡단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 장벽은 “우리 민족의 치욕”이며, “국토의 등에 꽂힌” 칼이라고 불리웠다.

미국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베를린장벽의 운명에 대해서 인민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는 않고)의 분단장벽이 개방되는 데에는 환호하면서 같은 시기에 남한으로 하여금 장벽을 허물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거부하고 있다고 꾸짖어 댔다.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가 행한 신년사에서 장벽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남한정부에 대해 “수백만 가구의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고, 겨울에 거처도 없이 추위에 떨며 죽어가고 있는 때”에 어떻게 “인민들로 부터 쥐어 짠 3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그런 장벽을 건설하는데 소비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캠페인이 진행되어 가면서 심지어는 “녹색론자들”까지 그 소동에 가세했다.

어떤 북한 생물학자는 환경보호에 관한 범세계적인 관심을 인용하면서 “그 지역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개발하기 위해” 장벽을 철거할 것을 촉구했다. (FBIS, 1990.2.28, p.22)

남한측의 부인에 대응해서, 북한측은 군사분계선 서쪽(전하는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대전차장애물들이 위치하고 있는)으로 부터 동쪽으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공동조사단을 남측에

파견하겠다고 제의했다. 북한측은 100명 이상의 조사단을 북한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남측에 보내기를 원했다.

이 조사를 준비하기 위한 회담은—남한정부의 독자적인 권위에 대한 합법성을 부인하면서—“양측 관계당국과 정당”의 대표들로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남한 정부는 그러한 조사 제의를 거부했다.

장벽에 관한 논쟁

장벽이 철거되어야 한다는 북한측의 요구가 남한 관계당국에 전달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캠페인은 명백한 프로파간다였고, 그래서 북한 당국자들은 이내 그것을 깨끗이 잊어버렸다.

최소한 북한 당국자들 중 어느 한 사람도 대전차장애물이 실제로 철거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 보다 장벽캠페인은 북한 인민들과 남한에 있는 소수의 “급진” 분자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Jacques Ellul(1968)은 선동 프로파간다와 통합 프로파간다의 차이를 언급한 적이 있다.

전자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사회변화의 효과를 거두려는 것인 반면 후자는 사회에 안정과 단합과 생기를 불어 넣으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장벽캠페인은 이러한 두개 모두의 목적에 기여했다.

남한측에 있는 관중들에게는 그 캠페인이 “장벽철거”, 즉 남한정부 전복의 요구로서 기여했으며, 북한 관중들에게는—이 보고서의 주된 초점인—김일성 정부와의 결속을 도모하려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 캠페인은 북한인민들로 하여금 지난 40년 동안 그들을 감금해왔던 물리적, 정치적 장벽이 약화될지도 모르는데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응집력을 고취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이다.

만약 북한 당국이 계속 인민을 통제하려 한다면, 이러한 장벽들—국내외 여행에 대한 정부의 통제 뿐만 아니라 군사분계선상의 진정한 장벽과 가시 철조망과 지뢰와 군대 들—이 점점 증가되든가, “정신적인 장벽”으로 대치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유동성에 대한 만족

사회심리학자인 Thibot와 Kelley(1959)에 의하면,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아닌가,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삶의 환경에 변화를 찾아야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서로 다른기준을 사용한다고 한다.

첫번째 기준은 비교수준이라고 불리워 왔는데, 과거의 경험(어떻게 만족해 왔는가)에 대한 기억과 현재 보장된 성과(오늘 어떤 만족을 기대할 수 있는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또 사람들이 획득할 수 있는 성과(예를 들면, 파악된 이웃의 만족)에 의해 설정된다.

그러나 행복하다든가 만족한다는 것이 사람들을 어떤 환경에 묶어놓고 그들의 정부에 충성을 바치도록 하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다.

충성—여기에서의 의미는 어떤 환경에서 이탈하거나 환경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거기에 머무르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은 또 다른 기준 즉 代案에 대한 비교수준에 의존한다.

이 기준은 그들이 현재 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들이라고 믿는 것에 의해 설정된다.

다른 환경에서의 성과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아주 적은 경우, 또는 그러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마치 행복한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환경에 남아 있으려 하듯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불만스러운 환경에 계속 남아 있으려고 한다.

그러나 만약 그들에게 보다 나은 대안으로 보이는 무엇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주어진다면, 그들은 지금 행복하든 않든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상태를 개선하려 할 것이다.

김일성정부는 이들 두가지 비교형식 모두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까지 북한의 삶의 수준은 완만하지만 꾸준히 개선되고 있었다.

인민들은 외부세계에 대한 지식으로 부터 고립되어 있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과거의 성과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만족해 했다.

북한 정부의 주된 우려는 인민들이 (비교할 만한) 다른 나라들의 시민이 한층 더 유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제13차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방문객이 쇠도한데 뒤이어 북한이 사회주의의 장점들을 찬양하는 선전캠페인에 매달리게 하는 동기를 부여했다. 그러나 지금 북한 정부는 투쟁해야 될 보다 심각한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북한의 생활수준은 쇠퇴하고 있어서 불만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그들의 외부세계에 대한 장벽을 보다 낮추게

되면 북한에서 견뎌야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생겨나 사회적인 불만과 동요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최근 동구에서의 변화와의 병행은 명백하다. 루마니아의 삶에 관한 어떤 책에 대해 쓴 최근의 비평에 의하면; “그것은 아마도 동구에서의 공산주의를 나쁘게 운명지은 화장지와 같았다. 일단 사람들이 보다 친근하고, 멋진 대안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그것은 바로 호네커와 차우세스크와 그의 동료들에게는 종말이었다. (목적지는 어디에 ?, 1991, p.83)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서구의 보다 나은 삶을 알게 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상당기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는 그들의 경계선을 벗어나거나 그들의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는 수단들을 가졌기 때문에 동구 공산주의가 종말을 고했다는 점이다.

북한사람들이 그러한 대안들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장벽은 유지되어야만 한다.

내부의 적

장벽선전캠페인의 진정한 메시지는, 북한정부가 인민들로 하여금 앞으로 도래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개방에 대비하도록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물리적 혹은 정신적 장벽들이 인민들로 하여금 북한이 “지상 낙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면, 장벽은 최소한 그들에게 다른 것들은 얻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 나름의 낙원에 만족해야만 한다는 것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김일성 정부의 가장 큰 두려움은 남쪽으로 부터의 공격이 아니라 사회적 붕괴와 내부로 부터의 정변이다.

예언자인 Micah는 “사람의 적은 그 자신의 내부에 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또는 보다 소박한 말로는 Walt Kelly가 Pogo만화책에서 “우리들은 적을 만났다 그리고 그는 바로 우리였다.” 고 말했던 것처럼.

사회적 결합을 유지하기 위한 캠페인들

북한사회의 응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기획된 선전캠페인들은 최소한 다음 네가지 카테고리속에 포함된다.

- (1) 북한은 지상의 낙원이다(paradise on earth;POE)
- (2) 소위 제국주의자나 종속적이고 타락한 사회주의자의 나라들은 지상의 지옥이다(hell on earth;HOE)
- (3) POE는 HOE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 (4) 충성은 혁명의 덕목이다.

《 지상의 낙원 》

대중들을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에게 지상의 낙원(POE)에 살고 있다고 설득하는 방법이다. 이 주제에 대한 한 변형이 현재 북한에서의 삶에 대한 장미빛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우리 인민들은 지금 국가의 성장과 번영의 황금기에서 가슴으로 만족을 느끼면서 행복하고 보람있는 인생을 누리고 있다.

— FBIS, 1992.1.3, p.29

노동자의 임금은 급격히 증가해 왔으며....공산품의 가격은 놀랄만큼 하락해왔고....무상교육, 의료보조, 유급휴가, 사회보험, 사회보장, 국가비용에 의한 휴양과 휴식과 같은 추가적인 恩典은 그들이 제공하는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받는 임금 보다 훨씬 많다.

— FBIS, 1992.3.2, p.27

이 주제에 대한 한 변형으로서 과거를 회고하는 방식에서는 현재가 과거에 대해 유리하게 비교된다.

과거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연필 한 자루 만들 수 없었던 우리 사회는 오늘날 국가와 개인의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원활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화되고 포괄적인 경제가 되었다.

— FBIS, 1992.1.3, p.31

현재에 대한 변형과 과거를 회고하는 변형, 양쪽 모두의 심각한 결함은 인민들이 그들의 현재 삶의 수준이 당국이 주장하는 것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독자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POE주제에 대한 미래의 변형으로 극복될 수 있다.

[우리] 인민들은 나라의 눈부신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예견하고 있다.

— FBIS, 1992.1.3, p.29

고깃국에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으며, 기와집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우리] 인민들의 오랜 열

망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것이다.

— FBIS, 1992.1.3, p.31

가난에 대한 인민들의 認知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당장의 삶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삶의 비물질적 관점에 특유한 표현으로 POE를 定義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국민이 높은 수준의 국가적 존엄과 자존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들이 진정한 번영을 성취했다고 말할 수 없다....아무리 그들의 경제와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 FBIS, 1992.1.3, p.30

마지막으로, 북한에서의 삶이 진정한 POE라고 끝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역사의 거대한 발전과정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할 것이며, 따라서 승리하는 측에 있는 것이 낫다는 역사적 논증이 있다.

역사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일시적인 좌절이나 뒤틀린 사건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인류는 독립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나아간다. 나아가는 길에서 역경에 굴복하고, 원칙을 버리고, 역사의 행로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은 실패와 타락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진리와 원칙을 단단히 붙잡고,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자로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 김일성, 1991, p.4

《지상의 지옥》

만족을 유지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외국의 형편이 국내 보다

도 더 나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방법이다.

북한의 경우, POE 저 편에 대한 이러한 접근의 利点은 인민들이 자기 나라 밖의 진정한 생활상을 결정할 방도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HOE프로파간다가 그럴싸 하고, 시종일관되는 한 그것은 믿겨 질 것이다. 남한에서의 삶이 악의에 찬 말투로 묘사되고 있다.

남조선의 근로조건은 매우 처참하다. “6공화국”의 팻쇼통치 아래 남조선의 노동자들은 최악의 근로조건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동안 노예처럼 일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임금은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 FBIS, 1992.1.28, p.27

미국의 상황도 별로 나을 게 없다고 말한다.

미국을 포함한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경기와 생산의 감소, 인플레이션, 급격한 기업파산, 실업의 증가는 현대 제국주의가 심한 경제적 모순으로 인해 붕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FBIS, 1992.1.17, p.25

미국에 있어서 다수의 국민들은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인권투사는 체포되고, 투옥되고, 백주대로에서 테러를 당하고 있다.

— FBIS, 1991.12.10, p.16

《 위협받고 있는 지상의 천국 》

집단내부의 단일성을 확립하기 위한 전통적인 수단은 구성원

들의 관심을 그들의 안녕에 대한 위협—진실이든 架空의 것이든—에 쏠리게 하는 것이다.

북한인민들은 외부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약화되는데 대해 자주 경고되어 왔다.

「제국주의자들」은 은갓 달콤하게 들리는 말로 꾸며댄 有毒한 부르조아 이데올로기를 퍼뜨림으로써 국민들을 비탄과 비관주의와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오염시키는데 열중하고 있다....그들은 또한 多黨정치체제, 이데올로기의 자유화, 소유의 다양화 등으로 알려진 반동적인 이데올로기를 퍼뜨림으로써 사회를 無政府상태, 혼돈상태로 만드려 하고 있다.

— FBIS, 1992.3.13, p.13

북한의 문화와 번영—그렇고 그런 것이지만—을 보호하고 미래에 더욱 위대한 번영을 성취하기 위한 처방은 단합과 당과 수령에 대한 불굴의 충성이다.

우리들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같이 강고하게 단합해야만 하며, 모든 敵들로 부터의 반혁명적 공격을 단호히 까부셔야 만 한다.

— FBIS, 1992.1.9, p.22

《덕행으로서의 충성》

만약 국민들이 국가로 부터 받는 恩典과는 무관하게 그들의 충성이 덕행으로 지지받을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집단의 幸, 不幸에 불구하고 응집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제는, 충성을 강요할 만한 영웅적인 업적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김정일의 승계과정에서 유명해졌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혁명의 길은 아직도 멀고 험하다. 그러나 혁명의 위대한 수령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혁명을 수행하겠다고 충성의 맹세를 했으며, 우리는 이 맹세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 FBIS, 1991.8.26, p.31

아들 딸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목표를 떠받들듯이 혁명전사들은 그들에게 불멸의 정치적 삶을 제시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지도자를 떠받들고 순종해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도덕적 志操이다.

— FBIS, 1992.3.10, p.15

《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탄압 》

만약 단합과 충성에 대한 어떤 호소도 먹혀들어가지 않으면, 항상 거기에는 탄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족하고 불충스럽기 때문에 위협적인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을 다소라도 만족스럽게 만드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국가가 반사회주의적인 요소에 대해 역시 독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

— FBIS, 1992.2.5, p.23

한국의 대응

한국은 최소한 세 방향--(1) 그것을 무시하거나 (2) 맞대응하거나 또는 (3)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기--에서 이 프로파간다

에 대응할 수 있다.

《프로파간다에 대한 무시》

첫번째 방향은 필수적으로 국가로서의 북한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통일에 이르는 직접적인 경로는 아니지만 좋은 간접 경로는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한국이 북한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증진하는 일에 몰두한다면 다음의 두 가지 중 한가지가 일어날 것이다.

첫째(원문:한편으로는), 만약 북한이 다른 데에서 (예컨대 일본으로 부터)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경제를 재건할 수 있을 것이며, 증대된 힘으로부터 나오는 보다 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으로 부터의 위협을 덜 느낄 것이다.

두 나라는 (최소한의 교역, 사회적·정치적 관계속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20-30년이 경과된 후 점진적으로 평화적인 공존관계를 창출해낼 것이다.

이것이, “분리적이지만 대등한 연방제” 제의와 일치하는 현재 김일성 政權 최고의 희망이다.

만약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독일통일의 형태가 아니고, 강하고 독립적인 두 나라가 결합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러한 통합사례는 거의 없다.

둘째(원문: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경제문제에 돈을 투입하는 것이 결실을 보지 못하거나, 일본이 한국의 동의 없이는

원조나 교역을 하지 않으려 하거나 하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를 위로 끌어올릴 수 없게 된다면, 그 때는 경제붕괴가 북한을 혁명과 혼돈속으로 내몰 것이다.

정부내의 구국파들은 김일성 체제를 무너뜨리고, 남한에 흡수되기를 청할 것이다. 이 과정은 북한(사회붕괴의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남한으로서도 (통일의 경제적 비용의 의미에서) 매우 비싼 비용을 치를 것이다.

평양에서의 정변에 수반하여 폭력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가정한다면, 그것은 또한 위협스러운 것임이 판명될 것이다.

《북한의 프로파간다에 맞대응하기》

북한의 반남한 및 주체사상 찬양 프로파간다에 대한 두번째 대응은 그것에 대해 맞받아치는 것이다.

남한은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통해 장벽을 설치한 쪽은 바로 북한이라는 점을 북한 주민들에게 인식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행동을 할 수는 없다.

남한의 선전활동이 북한주민에게 전달되려면 저돌적이면서도 침투적이어야 한다. (선전특공대?) 선전전은 실제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게다가 남한은 선전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북한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북한의 프로파간다가 불필요한 것으로 되게 해주기》

세번째 남한의 대응은, 북한 지도자들로 하여금 남한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것을 두려워 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1991년 남북간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협정”, p.33)의 목표들 중 하나이다.

합의서 제1조는 쌍방에 대해 상대방의 정치적, 사회적 체제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2조는 쌍방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대해 간섭하지 아니 할 것을 서약하고 있다.

외부의 영향에 대한 김일성의 염려에 대해 남한이 화해전략을 성실하게 추구하려 한다면, 공산주의의 붕괴를 공개적으로 고소할 듯이 바라보는 것을 삼가해야만 하며, 심지어는 경제, 언론, 인적 교류를 증진하도록 합의서에서 약속된 기회들 까지도 기꺼이 보류할 수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것들 역시 북한정권에게 時流의 안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간섭전략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마도 북한에 있는 가족, 친지들과 직접 만나기를 원하는 남한내 수백만 국민의 염원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것이 북한의 억압적인 통치에 대한 無言의 동의가 된다는 점일 것이다.

장래에 대한 전망

북한은 지난해에 조심스럽게 외부세계를 향해 문호를 개방했다. 외교전선에서 북한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일본, 그리고 미국

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했으며 (이러한 조치는 강요된 것이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핵사찰을 받는데 동의했다.

경제계에서는, 비공산권 경제와의 교역관계를 트려는 북한의 시도가 외교적 결속의 부족, 硬貨와 상품성있는 생산품의 부족, 자급자족 경제철학에 대한 계속적인 집착(최소한 이론적으로)에 의하여 압박을 받아왔다.

1984년의 합영법은 경제개방에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최근의 제안들도 단기적 경제회복에 아무런 약속을 주지 못했다.

경제개방에 관한 가장 극적인 신호는 아마도 북한이 남한에 대해 직·간접교역을 제의한 것일 것이다 (북한인민들이 이러한 교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북한정부가 문호개방을 더욱 좁히게 되었다. 외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과 북한인민들의 외국여행은 보다 쉬워졌지만 복수지역의 방문은 참가자와 목적지에 관하여 지극히 선택적으로 허용되며, 사람과 사람간의 접촉은 거의 없다.

동구와 舊소련으로 부터의 지난 3년간에 걸친 수천명의 북한 학생 소환은 아마도 북한에서의 보다 큰 규모의 전면적인 사회교류화를 위하여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다.

통일에 있어서 남한은 수동적인 응답자에 대해 어느 정도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한다.

북한으로 하여금 제나름의 속도와 기간에 맞추어 개방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인가? 부드럽게 떠밀 것인가? 아니면 압력냄비식 접근법으로 북한의 개방을 봉쇄할 것인가?

북한사람들의 딜레마는, 세계는 상호 의존적인 국가들의 가족이기 때문에 만약 그들의 사회를 개방하면 그들 사회의 독립성을 상당부분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개방은 북한 인민들이 그들의 경제적, 정치적 대안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김일성 정부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사회를 폐쇄된 채로 유지하는 것도 경제적 불경기과 정치적 붕괴를 포함한 그들 자신의 문제들을 若起시킬 것이다.

개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다루기 힘든 결정이며, 그래서 북한 지도자들은 쉽사리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 자료는 「중국·대만 협상사례 조사 ('95.6.13~20)」 및 「회담전문요원 미국 출장 ('95.4.23~30)」시 수집한 양안관계 및 한반도문제 관련 자료를 번역한 것입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